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

2005. 12. 28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 및 과제 ····· 1

1. 3년간의 경제운용 성과 ····· 1
2.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3

Ⅱ. 2006년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 4

1. 대외 여건 ····· 4
2. 국내 여건 ····· 6
3. 2006년 경제전망 ····· 7

Ⅲ. 2006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 9

Ⅳ. 5대 중간목표별 중단기 과제 ····· 13

1.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조성과 위험관리 ····· 13
2. 성장잠재력 확충 ····· 15
3.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 19
4.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 22
5.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 26

Ⅴ. 10대 중점 추진과제 ····· 28

1.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 28
2.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원활화 ····· 30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32
4.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 ····· 34
5.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 37
6.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 개편 ····· 39
7. 중동·BRICs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 기반 마련 ····· 41
8.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 43
9.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45
10.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기반 확충 · 47

※ 미래위험관리 등 중장기 시계의 정책대응 ····· 49

< 별첨 1 > 2006년 경제운용 중단기 정책과제
< 별첨 2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Ⅰ.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 및 과제

1. 3년간의 경제운용 성과

1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경제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시스템 안정과 경기회복 토대 마련**

○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따른 **시스템 불안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내수부진 속에서도 **무리한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을 지속**하여 경제가 점차 정상궤도로 진입

2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기틀을 마련하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 기업·금융·노사·공공부문 개혁 및 선진통상국가 기반 구축, 국가균형발전 등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러한 큰 틀에서 **중장기 정책과제를 일관성있게 추진**

○ 기술혁신, 인력양성, 신성장동력 확충,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과 함께 **중소·벤처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추진

3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동반성장** 시책 추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 노력 강화**

○ 기초생활보장 확대, 취약계층 자활지원 등 복지사각지대의 축소 및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추진

◇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으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선진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

05년 거시경제운용 성과

□ 05년 경제운용방향 마련 당시(04.12월) 정부는 정책목표 성격의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

○ 그러나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여건이 큰 폭 악화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3.0%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이 지연

□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 및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 경제운용이 가능하도록 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05.7월)하면서 경제 전망을 수정

○ 성장률 : 5% 수준 → 4% 내외

○ 일자리 창출 : 40만개 → 30만개 수준

○ 소비자 물가 : 3%대 초반 → 3%대 초반

○ 경상수지 : 200억불 수준 → 140억불 내외

□ 최근까지의 경제지표 동향으로 볼 때,

○ 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4/4분기에는 잠재 수준의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연간으로는 4%를 소폭 하회할 전망

○ 일자리는 하반기중 큰 폭의 고용 개선에 힘입어 연간 30만개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대 후반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경상수지는 견조한 수출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 180억불 수준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2.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과제

1 **(현 상황 평가)**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높아지고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

○ 그러나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투자둔화** 등으로 과거 수준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성장의 **생산·고용 파급효과도 약화**

2 **(구조적 과제)**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지만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음

○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이 둔화되고 있어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 중국경제 부상 등으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긴요

○ 경쟁과 개방 심화과정에서 나타난 **소득계층·산업·기업간 격차 확대를 시정**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복지시책의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복지수요, 고령화·저출산, 남북관계 등 재정소요에 대응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

3 **(사회적 갈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조화 등 **공감대 형성과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과제가 다수**

* 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시장성, 대외개방, 노사관계, 환경과 개발 등 다원적 가치의 조정문제

◇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주체의 적응력을 높여 동반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필요**

Ⅱ. 2006년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1. 대외 여건

1 (세계 경제) 05년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일본과 유로 경제도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세계 교역량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에 따라 05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주요국 성장률 전망(%)

	잠재성장률	05년 전망		06년 전망	
		IMF	OECD	IMF	OECD
세계 성장률	-	4.3	2.7	4.3	2.9
미 국	3% 내외	3.5	3.6	3.3	3.5
유 로	2% 내외	1.2	1.4	1.8	2.1
일 본	1.5~2.0%	2.0	2.4	2.0	2.0
중 국	8% 내외	9.0	9.3	8.2	9.4
세계 교역량	-	7.0	7.3	7.4	9.1

<註> IMF(05.9), OECD(05.11) 기준. 단,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 기준

2 (국제 유가) 원유 수급 및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배럴당 50$대의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 수요 증가세 둔화, 美 멕시코만 생산회복 등으로 05년에 비해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기관별 유가 전망 (Dubai油, 기간 평균, $/bbl)

	04년	05년	06년		
(전망 시기)	(실적)	(실적)	(10월)	(11월)	(12월)
美 에너지 정보청(EIA)	33.6	49.4	57.5	57.4	56.3
美 켐브리지에너지硏(CERA)			49.5	48.0	52.3

3 (국제 금융시장) 상반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당분간 美 달러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약세 요인 상존

○ 美 정책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대외불균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부각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소지

4 (세계 IT 경기) 상반기 중 재고조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주요 예측기관 IT경기 전망

(증가율, %)

	2004	2005e	2006e
· 반도체(WSTS*, 05.10)	28.0	6.6	8.0
· D램(Merrill Lynch, 05.9)	61.0	△2.0	9.0
· 플래시메모리(Merrill Lynch, 05.9)	91.0	48.0	25.0
· 휴대폰(Gartner*, 05.8)	29.6	15.5	8.8

<註> 반도체, D램, 플래시메모리는 매출액 기준, 휴대폰은 물량 기준,
<출처> WSTS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Gartner : 정보기술산업 연구조사기관

◇ 06년 대외 여건은 전반적으로 05년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 국제유가 급등, 주요국 주택시장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여부,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 조정 등 불확실 요인들이 상존

* 조류독감(AI) 확산시 국가간 교역 위축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

2. 국내 여건

1 전반적인 경기여건은 호전되고 있으나,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상황에 따라서는 이자부담으로 소비회복이 제약받을 소지

* 가계대출 연체율(%,기말) : (02)1.7→(03)2.2→(04)2.2→(05.10)1.5
* 개인 금융부채/가처분소득(%) : (02)129→(03)131→(04)132→(05^{e})130내외

○ 내수 회복과 기업수익성 개선 등 설비투자 여건은 호전될 전망이나, 건설경기는 둔화세 지속 소지

○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2 체감경기의 개선에 시일이 좀더 소요되고,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가 증가

○ 내수회복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여건은 다소 개선되겠으나, 공급과잉 등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

* 과잉진입 응답률(%) : 이·미용 78.6, 편의점 68.4, 음식점 68.0, 의류 61.0

○ 저소득·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양극화 완화·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조세수입 증대에는 어려움이 수반

3 06년 지방선거,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정치·사회적 일정이 경제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소지

3. 경제 전망

1 (성장) 잠재 성장률 수준인 5% 내외 전망

○ 민간소비는 그간 부진했던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4%대 중반의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설비투자는 내수회복으로 순환적 부진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건설투자는 둔화요인이 있으나 공공부문 공급확대, 민자사업 본격화 등으로 급격한 위축은 없을 전망

○ 수출은 해외수요의 지속과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등을 감안할 때 두자리수 증가세 지속 전망

2 (고용) 추세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증가세(35~40만명) 전망

○ 건설업 등의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에 따라 제조업 고용둔화세가 개선되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예상

3 (물가) 소비자 물가 3% 수준, 근원 물가 2%대 후반 전망

○ 내수회복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05년보다 확대되겠으나,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국제유가 등 비용요인도 상대적으로 안정될 전망

4 (경상 수지) 상품수지 흑자 폭은 05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전체로는 05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150억불 내외 흑자 기조 유지 전망

5 **(종합 평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2006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속에 잠재 수준의 성장·고용 전망**

	05년 실적	06년 전망
▪ 경제 성장률	3% 후반	5% 내외[1]
▪ 취업자 증가	30만명 수준	35~40만명
▪ 소비자 물가	2% 후반	3% 수준
▪ 경상 수지	180억불 수준	150억불 내외

1」 2006~07년 중 잠재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2008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이 가능할 전망

○ **회복 속도와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망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잠재 성장 수준으로의 회복 의견**이 지배적

※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치(Consensus forecast)
: 평균(Mean) 및 중위(Median) 전망치 5.0%

IMF	OECD	World Bank	Global Insight	한국은행
5.0	5.1	5.1	6.0	5.0
KDI	예산정책처	금융硏	삼성硏	LG硏
5.0	4.7	4.7	4.8	4.6

<註>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

< 정부 경제 전망의 성격 및 전망 방식 >

□ 그간 **정책적 의지를 담은 목표 성격의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였으나, **전망과 실적간 괴리** 등 문제점 야기

□ **전망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06년 전망부터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거시경제 전망 T/F"를 통하여 전망 작업**을 진행

○ **정부 전망치에 대한 판단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의 전망치(consensus forecast)도 제시**

○ **거시경제 T/F와 재정전망협의회, 세수추계 T/F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거시전망과 재정전망간의 연계성 강화

Ⅲ. 2006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1 2006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에 중점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 이러한 바탕 위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반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점차 이동함으로써 참여정부 3년간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

2 이를 위해 **5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

○ **단기적**으로는 06년 거시경제 전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정적 거시경제환경 조성과 위험요인을 관리**

○ **중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동반성장**과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토대 마련**

○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향후 미래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 등 **미래에 대한 착실한 준비 추진**

⇒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 **연내 가시적 결과 도출이 필요한 10대 중점과제를 집중 관리**

3 이와 함께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갈등과제에 대하여는 성숙된 논의를 토대로 **합의와 원칙을 도출하여 국가역량을 극대화**

※ 전략적 의사결정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과제(예시)
: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지배구조 개선, 의료·보육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방향, 대외개방, 재정지출소요 수준 및 충족방안 등

2006년 경제운용방향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 구축

(5%성장과 35～40만개 일자리의 지속 창출기반 마련)

단기	중·단기			장기
거시경제 안정과 위험 관리	성장잠재력 확충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①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② 금융시장의 안정 ③ 부동산 시장 안정기반 구축 ④ 물가의 안정적 관리	① 투자확대 여건 조성 ②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③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④ 핵심 전문인력 공급확대 ⑤ 연구개발 확충 및 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① 저소득·취약 계층 보호확대 ②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 ③ 고용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 대책 ④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⑤ 비정규직 고용 질 향상 및 처우개선 ⑥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⑦ 국가균형발전 시책 본격추진	① 금융시스템 개혁 ②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 ③ 선진노사관계 기반확립 ④ 공정경쟁 및 소비자주권 강화 ⑤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⑥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현 ⑦ 북방경제의 토대마련	① 저출산·고령화 대책 ②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③ 친환경·자원 절약형 경제 체제 구축 ④ 중장기 시계의 정책대응 및 미래위험 관리

[참고1] 외국의 경제운용 주요이슈와 정책대응 방향

1 주요국의 경제정책 동향을 보면 거시정책은 각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으나 **글로벌 불균형과 자산버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

○ 중점정책 분야로서 ① **경제시스템 혁신**, ② **미래 경쟁력 강화**, ③ **사회적 약자 지원**, ④ **고령화와 재정안정**, ⑤ **고유가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

2 각국의 05~06년 중 경제정책의 주안점

○ **(미국)** 경제자문회의(CEA)의 연례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05.2월)의 일부)에서 **재정·세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이민정책, 혁신 및 정보화** 등을 추구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중장기 발전계획(案)을 통해 **안정적 고도성장, 자주 혁신능력 제고, 효율적 에너지 활용, 都農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방안 발표

○ **(일본)** 내각부의 「경제재정운영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05.6월)」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책,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부 등은 **고용증진, 재정적자 축소(GDP 3%이내) 및 조세체계 단순화**, 파리 소요사태에 대응한 **사회통합** 등을 중점 추진

○ **(싱가포르)** 재무부는 경제·사회 정책운영 방향(Budget Initiatives, 05.4월)에서 **소득세율 인하, 금융·물류중심지(Hub) 육성, 사회복지 강화** 등을 제시

[참고2] 2006 경제운용방향 설문 결과

□ 2006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경부-KDI 공동으로 전문가(324명), 일반국민(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① 05년 대비 2006년 경제전망 : 금년보다 나아지거나, 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전문가 95.4%/일반국민 77.4%)

	크게 호전	다소 호전	비슷한 수준	악화	크게 악화
경제전문가	1.2	51.5	42.6	4.3	0.3
일반국민	0.9	23.9	52.6	19.0	3.4

② 2006년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 : 경제전문가 다수는 '경제활력 회복'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로 답변

	경제활력회복	일자리창출	선진시스템 구축	고부가가치 경제
경제전문가	62.3	9.9	10.2	6.8
일반국민	32.6	38.7	6.4	8.4

③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경제전문가는 '일자리 창출', 일반국민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답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복지지출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경제전문가	21.0	56.2	2.5	19.8
일반국민	15.6	32.8	8.0	43.4

④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경제전문가는 투자확대(42.6%)를, 일반국민은 중소/벤처/서비스산업 발전(18.0%)과 거시경제 안정(17.6%)을 주문

	투자확대	규제완화	거시경제안정	중소벤처·서비스업발전	국가균형발전
경제전문가	42.6	13.9	13.3	9.3	5.2
일반국민	13.9	8.5	17.6	18.0	12.4

□ 2006년 경제전망에 대한 다른 기관(국회예산정책처·시사포럼,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설문조사결과도 금번 조사와 유사

Ⅳ. 5대 중간목표별 정책 과제

1.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조성과 위험관리

1 경기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 운용

○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하방위험도 있으므로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탄력대응**

- **재정**은 **연간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를 견지하면서 **상·하반기 간에는 고르게 집행**

  * 06년중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므로 상반기 재정지출은 주요사업비 기준 52% 수준 집행(통합재정기준 50% 예상)

○ 실물경기와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

○ BTL·BTO 등 **민간투자 사업은 내실있는 추진에 중점**

  * 06년 예상 집행규모 : BTL 3~4조원, BTO 2~3조원 수준

2 금융시장의 안정노력 강화

○ 우량기업 주식의 공급확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 장기국채 발행, 외국인 장외 채권매매 허용, 채권소액거래 활성화 등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수급안정 도모**

○ 가계·중소기업 **대출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도**하고 신용·금리 위험관리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 노력 강화**

○ **외환시장의 비정상적 급변동에 대한 시장안정노력 지속**

3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8.31 부동산정책**에서 마련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

- 주택 최초구입자금, 금리우대 모기지론 등의 원활한 공급,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정책 추진**

- 수도권에 **900만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판교 등 **신도시 분양**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실천적 공급정책 추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체제 구축,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

○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 직주근접형 주거지원을 위한 **도심지내 임대주택 비축** 활성화 등 **주택·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 택지공급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임대차 보호강화**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

4 경제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안정 노력 강화**

○ **국제원자재·농축수산물의 수급불안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 물가안정기조 정착 등을 위해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수수료 협의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 06년 상반기 공공요금 조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원가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 개편안 마련

○ **07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

* 물가안정목표제는 韓銀法에 의하여 韓銀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현행 韓銀 중기물가안정목표 : 04～06년 평균 3.0±0.5%]

2. 성장잠재력 확충

1 투자확대 여건 조성

○ 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및 금융·세제 지원

- **노후된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의 보완** 등 기업환경 개선('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개정)

- 대학 및 기업 부설 연구소, 공공연구시험기관 등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를 허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공제율 10→7%), **R&D 세제 지원, 설비자금 공급 확대***등 세제·금융 지원 지속

  * 산업은행 설비자금 대출(조원) : (04년)6.1→(05년)7.1→(06년 계획)9.0

-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민·관투자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의 개별적 투자애로를 발굴·해소

○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

-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비전 및 전략을 수립**(06.1/4)

  * 신규·증액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 100개사를 선정, Needs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 외국인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06.2/4)

  * R&D센터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요건 완화 등

○ 규제개혁 노력 가속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06.6월) 및 하위법령 마련** 등 토지이용규제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산업안전·보건, 기업공개·시장제도, 환경관련 허가·보고 절차 규제 등 **21개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06.상)

2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창업활성화 등 창의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법인설립서류의 표준화·간소화** 등 창업 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개선 (상법개정)

- 기술력과 신용도가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해 **신·기보의 연대입보 기준 완화**

-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 스스로의 선별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방안**(05.6월)을 차질없이 추진

- 신용도·이용기간·금액 등에 따른 **보증료 및 부분보증 비율 차등 운용** 확대

- **금융기관 출연률 인상**(현행 0.3% → 06년 0.4%) 등 보증기관의 건전성 제고

-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 금리 차등화, 상환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수요자 편의형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화**

- **사업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

* 분할, 합병, 영업양도·양수를 통한 사업전환시 관련 절차 간소화, 사업전환용 자금융자, 부지를 처분하여 설비취득시 양도세 감면 등

- **채권은행협의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활성화

○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일정물품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의무화**(06.1월 시행)

3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

○ 업종별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법률)**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위해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외국법자문사법' 제정(06년))
- **(디자인) '일류상품디자인브랜드개발사업' 확대**(05년 20억원 →06년 30억원) 등 우수 디자인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 **(방송·광고) 외주활성화**를 통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시장을 육성**하고 **방송광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기술중심의 계약제도를 활성화**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건설사업 관리** 등 관련분야 제도개선 추진
- **(보석·귀금속) 유통구조를 양성화**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RFID 시범사업 실시, 양성화를 위한 세제 보완 등)

○ 관광·레저시설 확충 등 **문화·관광서비스업 발전**

-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카지노사업 인허가 관리권한의 제주도 이관 등)
-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공공형 대중골프장 건설 추진**

○ **사회서비스업**의 질적 수준 제고

- **(교육)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교수 확대** 등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 **(의료)** 의료기관의 **외부자본기반 강화, 국민의료비용 급증방지 방안 마련** 등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 서비스업의 경쟁력 분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평가지표를 개발**

4 핵심 전문인력의 공급확대 추진

○ **제2단계 BK21 사업***에서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공직 진출** 등에서 **이공계 우대**

* 06～12년간 추진, 1단계보다 연 지원예산 증액(2,000→3,000억원)

○ **외국전문인력 적극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국적 부여요건 완화** 검토

* Gold Card 소지자 등의 복수사증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무인 자동심사대' 등 외국전문인력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 일관된 **산업별·직업별 국가인력수급전망**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정비**

* 전망전담조직 설치 및 실시기관 선정, 직업분류체계 표준화, 기초통계 확충 등

5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시행(06.상)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06.3/4)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 연구개발성과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Connect-Korea **사업** 등을 통해 산·학·연 연계를 촉진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통합관리**(산학협력촉진법 개정)
- **대학·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교지·연구소 지역내 공장설립 허용 및 각종 부담금 면제**(벤처특별법 개정, 06.상)

* 예)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美),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英), 칭화대(中)

○ **'전략적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06.하)하고,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

3.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1 저소득·취약계층 보호확대 등 사회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143→162만명) 및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06년 6만회)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20%→130%이하) 등

○ **노인 일자리를 확충**(3.5→8만명)하고,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인상** 및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18→62개소)

○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주택전세자금 지원(1.6조원) 지속**

* 매입임대 : 연간 2,000호 → 연간 4,500호(15년까지 총 5만호) 공급
* 전세임대 : 연간 1,000호(15년까지 총 1만호 공급)

2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체제 강화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07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06년에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입법마련(도입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계층을 중심으로 운용)

○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을 확대**(6→7만명)하고, 근로유지형에서 **시장진입형 사업* 위주로 전환**

* 집수리, 폐자원 활용 등 정부투입 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2~3년)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

○ **휴면예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 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

* 다른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06년 20억원)과 연계

3 **고용창출 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자 취업지원을** 강화

○ **예산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 (04년)840억원,30천명→(05년)1,691억원,69천명→(06년)2,908억원,134천명

** 시범사업(60억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및 관련 법률 제정

○ **고용안정센터**를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고, 우수 민간기관에 취약계층 **취업지원 업무 일부를 시범위탁**하는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

○ 비정규직·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 비정규직 수강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실시 (06년 5,000명, 62억원), 근로자 훈련계좌제 시범실시(06.하) 등

○ **청년층의 취업정보 인프라 확충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청년층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해 **국가인력수급 전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 **청년구직자 DB를 활용**하여 취업알선·훈련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노동시장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4 재래시장 현대화 등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추진

○ 재래시장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및 시장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 06.상)

○ 전국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조사 결과(05.12월)를 토대로 **시장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06.상)

○ **생계형서비스 종사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특성별 종합컨설팅지원센터'로 개편**

5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 비정규직 입법 완료시 **하위법령 제·개정, 차별시정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원활한 법시행 여건 조성**

○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06.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06.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관리체계**를 마련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 **기술·인력교류 촉진 및 자금지원 확대**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대기업 확대(05년 26개→06년 35개) 및 Network loan 활용 확대 유도

○ 주요 대기업·공기업에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주요 업종별로 **성과공유 모델 및 표준성과 계약서 개발**을 추진

○ 유통업 분야의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 유통업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등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사례 확산 유도**

7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본격 추진

○ 계획수립·토지매수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본격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후속작업 진행 및 **추가 지정**

○ 쌀협상 국회비준의 후속조치로 국내외 농업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

* 06년 2월 중 국회에 쌀, 과수산업 위주로 보고하고, 06년 하반기에 농업·농촌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4.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1 금융규제 개혁·인프라 확충 등 **금융시스템 개혁 가속화**

○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통합**

-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하고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투자자 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등 금융규제 개혁 시스템을 상시 가동

○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메자닌 파이낸싱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등을 추진

* (현행) BBB이상 기업 → (확대) 연기금, 공기업, BB 이상 기업

○ **금융 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제도를 정비**

- **금융업권 및 생·손보간 업무구분 완화, 보험상품과 영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 폭발·붕괴 등 인위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보험을 도입**

○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신용정보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신용정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취급업무 확대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신협중앙회**의 자구노력 등 **정상화방안을 마련**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주의 의무제도 정착**

* 5천만원 이상 고액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2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 노력 가시화

○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 등 세제 합리화**

-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 강화 등 **소득 파악 제고 방안을 추진**

- **06년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분석하여 **연장여부 검토**

  *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일몰 규정 신설 추진

- **공동사업과세제도 개선방안**(06년중),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비 방안 마련**(06.상) 등 조세체계를 선진화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관세율 체계 조정** 및 **남북간 관세특례제도의 도입**

○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중장기적인 채무관리 계획 수립,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 방안 검토** 등 추진

- 국유재산 임대체계 정비, 국유지 개발방식 다양화 등 **국유지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활용도를 제고**

-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정부계약제도 개선

  * 현행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 →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국가통계위원회 위상·역할강화, 통계개발원 설치**(통계청), **품질진단 확대실시** 등 국가통계 개선·개발을 지속 추진

○ 가격보조금 등 **보조금 제도 합리화**

- **보조금 지급방식**을 일률적인 가격보조에서 **수요자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 연탄보조금, 장애인 LPG 보조금, 보육료 지원 등

-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 등 **유가보조금 지급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3 선진적 노사관계의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조기 처리** 추진

* 주요내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직권중재제도 및 긴급조정제도 합리화, 부당해고 구제절차 다양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체제 정상화를 도모**

4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

○ 민관합동의 T/F를 구성하여 Post-로드맵의 정책을 제시

- **대기업집단정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요건* 완화 방안 검토**

*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등

○ **민간의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 시장 자율규제시스템 정착

* 개인이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보완(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5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 **한·EFTA FTA는 06년 하반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ASEAN·캐나다와의 협상 마무리** 및 **주요국과의 협상 개시 여건 조성**

○ **DDA 농업협상**은 **점진적 시장개방과 신축성 확보**에 주력하되, **비농산물·서비스협상**은 **해외시장 확대 및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 對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고, **EDCF의 아시아 지원비중 제고*** 및 자원부국·신흥시장 중점 지원

* 아시아지역 EDCF 지원비중 : (01~05년) 58% → (06~09년) 70%

○ **중동지역의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BRICs와의 경협 인프라 구축과 진출기업 지원 강화**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 등 해외자원개발협력 확대

○ ASEAN+3 공동의장국 수임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 협력을 증진**하고, **IMF 쿼타 증액**을 위한 공동노력 강화

○ 05년 APEC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APEC 역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6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현을 본격화**

○ **금융허브추진기본법 제정, 금융허브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금융허브정책 추진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06.3월 출범)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지속적인 **외환규제 완화**, 기존의 **외환자유화일정**(2011년 목표) **단축 검토** 등을 통해 **외환시장 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개발 가속화

○ 인천공항 2단계사업, 부산·광양항 건설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종합물류업 인증제(06년 시행)정착,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

*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을 제정하여 물류관련 법제도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제고

7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활성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지원 방안 모색** 등 진일보한 남북경협정책 추진

5.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년)' 수립**(06.상)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구체화·체계화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보육·교육비용 경감**

* 차등보육료 확대 : (05년) 41만명/2,671억원 → (06년) 61만명/4,348억원

○ **민간보육시설**에게 아동수에 비례한 **기본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보육료 상한규제 예외시설 도입을 위한 관련 조치 추진**

○ **출산·육아휴직제도*** 및 이에 따른 **대체인력확보 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다양화: (현재) 전일제 휴직→(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개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고령친화적 금융제도 마련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06년 상반기까지 마련

2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

○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조속 전환**(국민연금법 개정안)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06년말) 이후의 국고지원방식 개선 및 국민의료비 급증방지 방안 검토

○ **고용보험의 적정 적립금 규모 설정**과 **보험요율의 합리적 조정체계** 마련 및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 추진

* 부과기준 : 임금총액 → 과세대상 소득, 부과방식 : 자진납 → 고지납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연금 수급보장에 대한 불안과 운용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우수 도입모델 발굴·확산 등

3 친환경·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 '온실가스의 처리기술개발 계획' 수립, '국가온실가스 배출 통계시스템 구축' 등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응

○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05~07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자원 기술개발과 재활용 산업 지원 강화

* 자동차업체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06.1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06.9월) 등

4 중장기 시계의 정책대응 및 미래위험 관리

○ 중장기에 걸친 재정전망 및 재정위험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 공적연금 개혁, 세출구조조정 등의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비인플레적 방식의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

-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세제·세정 혁신을 일관성 있게 추진

* 06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안 확정

○ 미래의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계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 추진

- 중장기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포함하는 등 단기 대응중심의 현 위기관리시스템을 보완

○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전망 작업을 추진

* 06년중 관련부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장기전망 T/F에서 작업 착수

Ⅴ. 10대 중점 추진과제

1.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기 회복과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

○ 재정조기집행, 추경편성 등 재정의 경기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저금리 기조를 견지

○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을 통해 고유가·환율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응 강화

□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병행 추진

○ 신용불량자 대책,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 소득세율 인하 등 가계부채 조정과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

○ 규제개혁 등 투자애로요인 해소,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높아지고 지표경기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이 개선

○ 05년 4/4분기 이후에는 민간소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 속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그간 수출주도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전망

□ 다만,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체감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하방위험도 있으므로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탄력대응**

○ **재정**은 **연간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를 견지하면서 **상·하반기 간에는 고르게 집행**

* 06년중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므로 상반기 재정지출은 주요사업비 기준 52% 수준 집행(통합재정기준 50% 예상)

○ 실물경기와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 강화**

□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기반 확대노력 강화**

○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06년 약7만명 확대), 취약계층의 자활확대(6→7만명), 기초생활보장 내실화(143→162만명) 등 **저소득층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 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확대, 민자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등을 통해 민간건설투자의 부진소지를 보완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공제율 10→7%), **R&D 세제지원, 산업은행 설비투자 자금 공급확대**(7.1→9.0조원), **규제개혁** 등으로 설비투자 회복을 지원

□ **금융·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

2.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원활화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월),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05.6월)을 마련하여 창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 지원

○ 일괄의제처리 인허가 사항을 확대(48→74개)하고 민원처리협의회・사전심사청구제・일괄협의제 등을 도입

○ 보증・정책자금 지원에 시장원리 도입을 확산하고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 중소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워크아웃 활성화방안을 마련・추진(05.6월)

○ 채권은행협약 개정을 통하여 채권금액이 50억원 미만이더라도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그간 지속적인 창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창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비해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 소요

* 신설법인수 : (04.1～10월) 4만개 → (05.1～10월) 4.4만개
  창업배율(신설법인/부도법인) : (04.1～10월) 18.0 → (05.1～10월) 23.8

* 국가간 기업여건 평가(세계은행, 05.9월)에서 우리나라는 창업부문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97위)
  : 평균 12단계 절차에 22일 소요(OECD 평균 6단계 절차에 19일)

□ 혁신 중소기업 지원확충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골격이 마련된 만큼 향후 일관된 정책집행이 필요

* 워크아웃으로 04.7～05.9월 중 2,500개 기업의 4.8조원 채무재조정

* 금융지원체제 개편방안은 05년 제도설계를 마치고 06년부터 본격 시행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법인설립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창업을 촉진

① 프랑스(04년), 일본(05년)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폐지된 **최저자본금 제도(5,000만원) 폐지**

②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지점 관련 등기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당사자가 직접서류를 작성하여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

④ 회사설립 등기에 필요한 **공증서류**(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를 **최대한 생략하는 방안 검토**

□ **사업전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등 지원**(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

○ **분할·합병, 영업양도·양수**를 통한 사업전환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 등 **관련 절차 간소화**

○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 융자, 부지를 처분하여 설비 취득시 양도세 감면 등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 **거액·장기·우량기업의 보증이용 축소**를 유도*하고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충

* 가산보증료 부과,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 시장 친화적 수단을 활용

○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구조를 개편**하고 **신용도에 따른 지원금리 차등화를 확대**

○ 채권은행협의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참여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제도 활성화**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 내용 >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 도요타, John Deere 등은 협력업체의 기술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원가절감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시행

□ **3차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05.5.16일, 7.5일, 12.22일)에서 **상생협력방안 확정**

* **성과공유제,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교류,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 등의 방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산업구조의 전환, 중국의 부상, 경기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

* 영업이익률(%): 대기업 (02년)7.5→(04년)9.4, 중소기업 (02년)5.3→(04년)4.1
  부채비율(%): 128.9 91.9, 152.1 138.7

□ 두 차례 상생협력회의 이후 주요 대기업 및 업종단체의 상생협력사업이 확대되는 등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

*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조성(대기업 출연), 중소협력업체에 전액 현금결제(LG전자 등), 성과공유제 채택(POSCO, 한전 등), 공동부품 개발(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기계산업 상생협약 체결(05.6월)

□ 06년에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상생협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 산업연구원 조사(05.11.25~12.1일) : 납품업체들은 대기업들의 **지원계획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05년 마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

○ 대형 할인점, 홈 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유통분야의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 상생협력 정책과제의 확대 추진

○ 대·중소기업간 **기술·인력 교류 촉진 및 자금지원** 확대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확대
-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망중소기업에 투자자금 지원
- Network loan을 통한 납품업체 지원확대
- **대기업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사례 확산 유도**

○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에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고 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성과공유 모델 및 표준성과계약서** 개발

□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간의 상생협의회 구축

○ 대·중소유통업체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의 **상생발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추진**

4.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 참여정부 출범이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

○ '서비스산업 **세제·금융·인프라 개선방안**'(04.3월) 및 **18개 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04년)

○ **05년 중 27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을 대부분 마련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도 상당부분 발굴·개선**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취약**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한국=100,02년): 미국(217,01년), 프랑스(190), 일본(183)

○ 이로 인해 **여행·유학·의료 등 해외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그 규모도 확대**

* 서비스순수출의 성장기여도(%p) : (04년)△0.4 → (05.상)△1.2
* 가계소비대비 1%의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될 경우 GDP 0.9%p 증가

□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 **사회서비스업**(교육·의료·보육 등)은 **공공성(재정투자방향)과 시장성(규제완화)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교육·의료 서비스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선택적 규제특례 방식을 적용

○ 다만, 의료분야는 **부문별 자원의 공급 불균형 현상 등을 치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 병상수 국제비교 : ①급성(인구 천명당) : 한국 5.2 > OECD중간값 3.1
  ②장기요양 : 한국 0.4 < OECD중간값 4.0
* 병원의 영세성 :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이 전체 병원 수의 83.1%, 병상의 54.1% 차지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기 마련된 27대 서비스강화대책을 토대로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을 확정**(06년초 대외경제위원회 개최)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확보 지원**

*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등을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률 선진화를 도모

○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쿠폰제 경영컨설팅」제도 활성화**

○ 우수한 디자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디자인기술개발사업**중 **중장기 대형사업 확충**

○ **외주활성화**를 통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시장을 육성**하고 **가상, 중간, 간접 방송광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보석·귀금속 산업의 음성적인 유통구조를 양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 실시 및 1년 주기의 서비스업 통계제도 개선

* 총조사 결과는 향후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에 활용

○ 운수, 정보통신, 금융·보험, 유통 등 주요 **서비스산업별로 생산성 실태조사 실시 및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

□ **국민의료비 부담의 급증을 방지**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추진

○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등 **의료자원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 전문병원 활성화,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 검토

- 병원채 도입, 의료산업펀드 구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추진

○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공유**(개인진료정보 제외) 및 상품 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05~08년) 추진, 공공병원·보건소 조직정비 등 저소득층의 **의료분야 사회안전망 강화**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간 **공공의료시스템 정비** 등 관련법 제·개정

○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추진

-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의료의 질 제고

-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 **유통체계의 투명화**를 통한 비용 절감방안 검토

5.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 고용창출 능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등을 신규 고용창출원으로 발굴**(일자리창출 정부종합대책, 04.2월)

○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05.4월)

* 고용서비스 선진화 성공모델의 조기정착·확산을 위한 6개 시범센터 운영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시장의 필요에 의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개선의 여지가 큰 상황**

○ 사회적일자리의 경우, 정부지원은 확대*되었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원으로서의 기능은 미흡**

- 대부분의 사회적일자리가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여 **지원 중단시 사라지는 단기 일자리의 성격**

* (04년)840억원,30천명→(05년)1691억원,69천명→(06년)2908억원,134천명

○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확산은 미흡

* 시범센터 운영기간(05.1～10월)중 구인·구직자 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전체 센터)22.0%, (시범센터)97.7%

○ **민간부분 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영세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

* 직업소개소 현황(개소): (98년)1,902→(00년)3,378→(04년)6,498→(05.6월)6,610

* 유료직업소개소 1개소당 연평균 매출은 57백만원에 불과(04년)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사회적 일자리) 정부지원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체 수익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형 모델'로 발전**

○ **사회적 기업의 운영주체를 기업·비영리단체 등으로 폭넓게 허용**하되,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까지, 영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부여로 한정

○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검토

-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취약계층 구매자에 대한 **바우처 등 간접지원방식 도입**

○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인증, 정부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관련법 개정 포함)

□ (고용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산업을 육성

○ **고용안정센터**를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개편

* 센터장 공모, 자율운영권확대 및 성과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고용안정센터를 성과중심형 혁신조직으로 개편**

* 개별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 적합 훈련과정·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민간 고용서비스**를 유망산업으로 육성

* **우수기관을 평가·인증**하여 구인 구직자에게 합리적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

* 시장에 의한 가격형성이 가능하도록 **직업소개 요금제도 개선**

○ 취약계층 취업지원업무의 **민간위탁 시범실시, 민-관 고용 정보망 연계** 등 민관협력을 강화

6.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 개편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 현행 자본시장관련 법령 체제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겸업화·대형화된 투자은행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칸막이식 규율**을 하고 있어 동일한 금융투자업무에 대해 **서로 다른 규율이 적용**되고 있고 **투자자 보호수준도 상이**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열거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음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최첨단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금융 빅뱅**(Big bang)을 촉발시킬 필요

□ 03년부터 추진해 온 금융통합법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가 큰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을 우선 추진하기로 05년 결정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을 추진**

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

- 선진 투자은행과 같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증권서비스, 직접투자** 등 다양한 **영업모델**(business model)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②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예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허용

-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증권·구조화 증권**과 자연·사회 현상 등 모든 위험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설계·취급 가능**

- 금융투자회사가 대표기관을 통해 **결제**(카드, 지로 등), **송금, 수시 입출금**(CD/ATM)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③ **동일한 금융투자업무**는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규율**(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을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없앰으로써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던 영역**을 보완

④ 투자권유, 발행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시키고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를 도입하며 발행공시 적용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만을 남기고 **300여개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1/3이상을 철폐**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

- **펀드 종류**(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 등)**별 운용자산 제한을 철폐**하여 펀드가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

7. 중동·BRICs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 기반 마련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 **국무총리 중동 순방**(05.11.21~12.2일)을 계기로 중동진출 확대와 **경제·통상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

* '중동진출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마련(05.12월)

○ 원조물자 공여, EDCF 자금공여, 연수생 초청사업 실시 등을 통해 **중동국가와의 우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브라질, 러시아, 인도** 경제가 최근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면서 범정부차원의 「**BRICs국가와의 경협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05.11월)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최근 5년간 고유가로 중동지역에 유입된 오일머니는 **2조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

○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되면서 중동 지역에 유입되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BRICs는 세계 인구의 42.6%, 면적의 28.7%를 차지**하는 신흥 거대경제권으로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

* 06년 성장전망(IMF, %): 중국 8.2, 인도 6.4, 러시아 5.3, 브라질 3.5

○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 과제 >

□ 對중동 플랜트 수주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석유·가스 탐사 개발 사업 등 **에너지·자원개발 정책과 연계한 플랜트 수주에 대한 지원 강화**

* 「중동 플랜트·건설 수주지원센타(두바이)」 설치, on-line을 통한 발주 정보 제공, 해외건설펀드 설립 등

○ 수출유망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공동 물류센타 확충** 등을 통한 소량·다품종 수요에 대응

□ 중동지역과의 정부·민간간 교류협력기반 확충

○ 중동지역 내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투자·에너지·IT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간 협의채널을 확대**

○ 「**對중동 민간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자유치·제3국 공동 진출 등 민간간 협력을 확대

□ BRICs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

○ BRICs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취합·정리하여 제공하는 종합 「Information Center」를 구축

○ BRICs 국가·지역별 특성에 맞춰 각 **국제대학원을 전문화**하여 **효율적인 지역전문가 양성**을 유도

○ 범정부차원의 「**BRICs 협력지원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진출 전략을 협의하고 **對BRICs진출기업 지원 강화**

8.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 동북아 금융허브 구현을 위해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03.12월, 05.6월)'하에 80개 세부추진과제 선정하여 추진

○ 07년 금융허브 기반 구축, 10년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 완성, 15년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을 목표

□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물류체계 개선 종합대책(04.3월)을 수립 점검하는 등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 추진

*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 수립(03.8월)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되고 외국금융기관들의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증대

○ 주식·외환·자산운용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푸르덴셜그룹의 아시아 지역본부 진출이 예정(06.1월)

* 외환시장 일일거래액(USD억) : (03)122 → (04)188 → (05.3/4말)226
* 펀드 수탁고(조원) : (03)145.5 → (04)186.2 → (05.11말)201.9

□ 최근 중국 상해 양산항이 개장(05.12월)되는 등 동북아 각국의 물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공항·항만 물류 인프라 조기 조성, 물류선진화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수요를 선점하고 해외 물류기업을 유치

* 부산항(만TEU): (03)1,041→(04)1,149, 인천공항(만톤): (03)184→(04)213
* 국제적 특송업체인 DHL, TNT를 비롯한 KWE, 스타인벡 등 유치

○ 항만의 노무공급체계 개편(05.12월) 및 부산·인천항 항만공사 설립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기반을 마련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구축**

○ '금융허브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금융허브 추진위원회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외국금융기관 한국 진출을 촉진**

○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 대학원 설립**(06.3월)을 차질없이 추진

○ KIC 설립과 퇴직연금제 시행, **외국인의 채권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과 채권시장의 국제화 촉진**

○ 지속적인 **외환규제 완화**, 기존의 외환**자유화일정**(2011년 목표) **단축 검토** 등을 통해 **외환시장 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가속화**하여 국제개방도시 및 항만으로 육성

○ **부산항 신항 개장**(06.1월), 송도 국제학교·병원 등 주요 사업을 착공하여 개발 본격화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등 행정지원체계 강화

□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 추진을 위해 **항공, 도로, 철도, 해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 제정 등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 **제 3자 물류를 활성화**하고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조기 정착**

9.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03년 10.29대책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었으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과 근본적 개혁 달성에는 미흡

□ 부동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 8.31 부동산정책 마련

○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

○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환수

○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택지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을 추진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8.31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기 시작

○ 그동안 후속입법의 지연에 따른 시장의 관망세 지속 등으로 본격적인 가격하락 추세는 시현되고 있지 않으나

○ 후속입법의 완료와 공급확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으로 장기적인 시장안정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8.31 **부동산정책**에서 마련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우대 모기지론 등의 원활한 공급,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추진**

○ 수도권에 **900만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판교 등 **신도시 분양**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실천적 공급정책 추진**

* 김포·양주지구 : 06.3월말까지 예정지구를 확대 지정
평택 평화도시, 송파거여지구 : 06년 상반기 중 지정 추진
판교 신도시 : 06년 3월(25.7평 이하), 8월(25.7평 초과) 분양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체제 구축,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

- 실가등기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호가위주의 민간 통계에서 벗어나 **실가에 기초한 정부통계발표방안 강구**

-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07년 입법추진) 등 **가격공시대상 확대 및 과세방법 개편***

* 현행 구분평가·구분과세를 통합평가·통합과세로 전환

□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 **주택·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 도시서민의 직주근접형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 임대**를 활성화하는 등 **도심지내 임대주택 비축** 활성화

○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택지공급 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 유도**

- 우선변제 가능한 임대보증금 대상 확대 등 **임대차 보호 강화**

10.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기반 확충

<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 참여정부 들어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는 한편,

○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장기주식형저축 및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등 **약 1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축소**

□ 재정측면에서는 **세출구조조정의 지속**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 **재정운영의 틀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 강화

< 현 상황과 성과평가 >

□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세입감액추경 편성 등 **세입여건은 04년 이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조세부담율은 19%대에서 안정적인 추세**

* 조세부담률(%) : (02년) 19.8, (03년) 20.4, (04년) 19.5, (05년^{e}) 19.6

○ 신용카드 활성화, 기장의무자 확대 등 **세원투명성과 소득파악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자영사업자의 세부담과 과세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자영사업자의 1인당 소득세부담이 근로자보다 크게 증가
· 자영자부담(만원): (98년)86→(04년)160, 근로자: (98년)41→(04년)70
* 자영사업자 과세인원도 크게 증가
· 자영자수(만명): (98년)123→(04년)224, 근로자: (98년)627→(04년)627

□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복지수요 증가, 공적연금 문제** 등으로 **재정지출소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 재정 확보를 위하여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① R&D·서비스업 지원,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유도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

② 부동산 투기·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지속 추진**

-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들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과세인프라 구축**

  * 현금거래분에 대한 소득파악 방안과 장부기장유도 등 **근거과세 확대방안을 모색**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수임건별 수임액이 기재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과세자료 수집을 확대**

  *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간 소득신고 자료 **정보공유 체계 강화**

③ 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연장여부 검토**

-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일몰 규정 신설 추진

□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주어진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 **세출구조조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형 공공투자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

○ 연금·복지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서 **지출구조개혁** 추진

< 미래 위험관리 등 중장기시계의 정책대응 >

※ **상기 10대 중점과제의 추진과 함께 미래 위험관리 등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대응 착수**

□ 미래준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전망 작업을 추진

○ 중장기 인구수급, 주택수급,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거시 경제전망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전망간의 일관성 유지

* 06년중 관련부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장기전망 T/F 구성, 작업 착수

□ 중장기에 걸친 재정전망 및 재정위험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세입 및 지출 전망 작업 추진

○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

○ 공적 연금개혁·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 방안 등을 06년중 마련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재정지출 소요에 대비

□ 미래의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계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 추진

○ 중장기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현재 단기적인 위기 예측 및 대응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위기관리시스템(EWS)을 보완

○ 각종 위원회와 부처에서 수립·운용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종합 점검하여 정책간 정합성 제고

< 별 첨 1 >

2006년 경제운용 정책과제 세부내용

목 차

Ⅰ.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조성과 위험관리 ····· 1
1.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 1
2. 금융시장의 안정 ····· 2
3.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3
4. 물가의 안정적 관리 ····· 4
Ⅱ. 성장잠재력 확충 ····· 5
1. 투자확대 여건 조성 ····· 5
(1) 투자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및 금융·세제 지원 ····· 5
(2) 외국인투자 유치 ····· 6
(3) 규제개혁 추진 ····· 7
2.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8
(1)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원활화 ····· 8
(2)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 시행 ····· 10
(3) 중소벤처생태계의 건전성 강화와 금융관행 개선 ····· 11
(4)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부품·소재 경쟁력강화 ·· 13
(5)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창출 및 경쟁촉진 ····· 14
(6)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15
3.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 ····· 16
(1)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강화 ····· 16
(2) 문화·관광 서비스업 발전 ····· 17
(3)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18
(4) 사회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유도 ····· 19
4. 핵심 전문인력의 공급확대 ····· 20
5. 연구개발 확충 및 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 21

Ⅲ.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 24
1.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확대 ····· 24
2.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체제 강화 ····· 25
3. 고용창출 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강화 ···· 26
(1) 고용창출 기회 확대 ····· 26
(2) 청년실업 대책 ····· 27
4.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 28
5.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 29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30
(1) 상생협력 정책과제의 확대 추진 ····· 30
(2)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 31
7.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본격 추진 ····· 32
(1)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 32
(2)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33
Ⅳ.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 34
1. 금융시스템 개혁 ····· 34
(1) 금융규제 개혁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 ····· 34
(2) 금융중개 기능의 효율화 ····· 35
(3)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 36
(4)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및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 37
(5)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및 심사분석 역량 강화 ····· 38
2.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 ····· 39
(1) 세제 선진화 ····· 39
(2)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 42
(3) 가격보조금 등 보조금 제도 합리화 ····· 45
(4) 기금·공기업 혁신 ····· 46
(5) 국가통계 개선 ····· 47

3. 선진적 노사관계 기반 확립 ····· 48
4. 공정경쟁촉진 및 소비자주권 강화 ····· 49
(1)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 ····· 49
(2) 소비자 주권 및 국제협력 강화 ····· 50
5.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 51
(1) FTA 확대 및 DDA협상 내실화 ····· 51
(2)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강화 ····· 52
(3) 중동지역·BRICs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해외자원 개발 ·· 53
(4) 국제 금융협력의 내실화와 주도적 역할 강화 ····· 55
(5) APEC 역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 56
6.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현 ····· 57
(1) 금융시장의 국제화 ····· 57
(2) 외환시장 안정 기반 강화 및 외환제도 선진화 추진 ···· 59
(3)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60
(4) 물류산업 선진화 ····· 61
7. 북방경제의 토대 마련 ····· 62
Ⅴ.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 63
1. 저출산·고령화 대책 ····· 63
(1) 저출산 대책 ····· 63
(2) 고령화 사회의 대비 ····· 64
2.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 65
3. 친환경·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 67
4. 중장기 시계의 정책대응 및 미래위험 관리 ····· 68
(1) 중장기 시계의 재정운용 ····· 68
(2) 미래준비를 위한 체계 구축 ····· 69

Ⅰ.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조성과 위험관리

1.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 경기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 운용

○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하방위험도 있으므로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탄력대응**

- 재정은 **연간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를 견지하면서 **상·하반기 간에는 고르게 집행**

  * 06년중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므로 상반기 재정지출은 주요사업비 기준 52% 수준 집행(통합재정기준 50% 예상)

○ 실물경기와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 강화**

□ 민간투자 사업(BTO, BTL등)의 내실있는 추진

○ **06년 BTL 사업 계약 규모는 약 5.7조원 계획**(지자체 사업 포함시 약 8.3조원)

  * 06년 예상 집행규모 : BTL 3~4조원, BTO 2~3조원 수준

○ 민간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 최소운영수입보장 개선 등 민간투자제도 정비

2. 금융시장의 안정

□ 거시금융변수의 안정과 증권·대출·외환 등 금융시장의 성숙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마련

□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권시장의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

○ 간접투자 활성화 등 수요기반 확대를 지속하면서 우량 기업주식의 공급을 적정 수준에서 확대

- 異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노력을 제고

○ 채권시장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 도입 등 개인·외국인의 참여 확대, 국채 분산발행 등 채권수급 안정노력 강화

□ 가계·중소기업 대출의 적정 수준 증가세를 유도하고 가계대출 등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

○ 부동산담보대출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

- 신용·금리 위험관리 강화, 예상손실을 감안한 충당금의 충실한 적립 등 금융회사의 부실대응 능력 강화 유도

○ 자금사정 종합지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상시 점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보증을 확대

□ 환율은 외환수급, 경제펀더멘탈 등을 반영하여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환투기나 과도한 불안심리 등에 의한 비정상적 급변동에 대한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

3.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8.31 **부동산정책**에서 마련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

○ 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우대 모기지론 등의 원활한 공급,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정책 추진**

○ 수도권에 **900만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판교 등 **신도시 분양**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실천적 공급정책 추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체제 구축,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

- 실가등기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호가위주의 민간 통계에서 벗어나 **실가에 기초한 정부통계발표방안 강구**

- 세대별 합산에 따른 **세무행정사항을 보완**하고 세액계산 안내 등 **신고납부제도 개선 및 부동산 공시가격 시행상 문제점 보완**

  *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간 전산·자료 협조체계 구축

-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07년 입법추진) 등 **가격공시대상 확대 및 과세방법 개편***

  * 현행 구분평가·구분과세를 통합평가·통합과세로 전환

□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 직주근접형 주거지원을 위한 **도심지내 임대주택 비축** 활성화 등 **주택·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 택지공급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임대차 보호강화**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

4. 물가의 안정적 관리

□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05년에 비해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안정노력의 강화를 통한 경제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

○ 특히, 국제원자재·농축수산물의 수급불안 등 **경제외적 요인에 대하여 적극 대응**

*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관측사업과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사업을 확대 실시[계약재배 확대(억원): (05년)10,482→(06년)11,422]

○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 **물가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 추진**

○ 05년에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한데 이어 06년에는 **공공요금 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

* 06년 상반기 공공요금 조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원가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 개편안 마련

○ 수요자가 제한적이며 물가영향이 낮은 수수료는 **협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무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수수료 산정 및 협의 지침(재경부 지침)」제정 및 시행(06.1.1일)

□ **07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

* 물가안정목표제는 韓銀法에 의하여 韓銀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현행 韓銀 중기물가안정목표 : 04～06년 평균 3.0±0.5%]

Ⅱ. 성장잠재력 확충

1. 투자확대 여건 조성

(1) 투자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및 금융·세제 지원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노후된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의 보완** 등('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개정) 기업환경 개선

○ 대학 및 기업 부설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를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06.상)

○ **중소기업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실태 조사를 강화**

*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산자부)'의 보완 또는 신규조사 검토

□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 지속**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공제율 10→7%), **R&D 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지속

○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공급 확대**

* 산업은행 설비자금 대출(조원) : (04년)6.1→(05년)7.1→(06년 계획)9.0

□ **기업의 개별적 투자애로를 발굴·해소 체제 구축**

○ 기업신문고, 중소기업체험단* 등에서 접수된 각종 애로사항은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등을 통해 적극 해소**

* 05년중 467개업체에 1,300여명을 파견, 850건중 600건(71%) 처리

○ 「**민·관투자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를 발굴**·해결하고, **대형투자프로젝트는 『전담요원(PM)』을 지정·지원**

○ 기업사랑운동의 확산, 경제교육 내실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등 '**기업 氣살리기**'를 위한 과제 지속 추진

(2) 외국인투자 유치

□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 비전 및 전략 수립**(06.1/4)

○ 다국적기업의 지역거점,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 핵심원천 기술을 포함한 부품·소재분야 중점 유치

○ 지분율, 투자시기, 업종 등 기투자 기업의 행태 분석을 통해 신규·증액투자 가능성이 높은 **타겟기업 100개사를 선정, Needs별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 외국인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수립**(06.2/4)

* 06년 상반기 중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방향 확정

○ R&D센터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유치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Cash Grant) **요건 완화**

□ 외국인 투자환경개선과 상시적 해외투자자 IR활동 강화

○ APEC투자환경설명회(05.11월)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과제 발굴**

○ Invest KOREA의 **고충처리팀을 옴부즈만 직속기구로 변경**하여 **옴부즈만의 애로사항 해결기능 강화**

○ 06년 중 참석예정된 **각종 국제회의를 활용**,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에게 **한국 경제 현황을 수시 홍보**

○ 해외투자자의 피드백을 파악·반영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

(3) 규제개혁 추진

□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06.6.8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 및 지역·지구 신설과 지정실태 등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지역·지구 지정내용과 규제안내서*** 등의 **단계적 제공**에 착수하고 행위제한 내용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 주택·공장 건축 등을 위해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기준·절차·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

○ 05년중 부처별로 마련한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지속 추진

* 군사관련 4개 구역 통·폐합,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지구 조정, 군사시설 주변 및 수변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시장·군수의 보전산지 전용허가 권한 및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등

□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여러부처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의 발굴·정비 노력 지속**

○ 총 54개 덩어리규제 중 04~05년 중에 **33개 과제***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 육상·해상·항공운송 규제, 관광·레저관련 규제, 공공정보이용 활성화, 전자상거래 규제 등

○ 06년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업공개·시장제도, 환경관련 허가·보고절차 규제** 등 2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내 마련**

2.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1)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구조조정 원활화

□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

*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중심으로「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05.5.26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① 프랑스(04년), 일본(05년)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폐지된 **최저 자본금 제도(5,000만원) 폐지**

②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지점 관련 등기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

④ 회사설립 등기에 필요한 **공증서류**(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를 **최대한 생략하는 방안 검토**

□ 06년중 환경·노동·안전 등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수규제만 존치**하고 여타규제는 일괄 철폐하는 **"규제네거티브 방식"**을 시범 적용

* 06년중「**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여 존치 필수규제 및 시범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

□ **창업자의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연계지원 강화**

○ 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직접·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컨설팅·교육·입지 등 지원시책을 연계**

○ 창업보육센터의 역량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창업보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입주자에 대한 기술·마케팅 등 종합지원 추진

□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제도* 활성화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근거하여 여신액 50억원~500억원인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구조조정 제도

○ **채권은행협의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참여

* 현재 **채권은행협의회 참여기관:** 16개 시중은행, 3개 특수은행(산은・수은・기은), 신보・기보・수출보험 공사 등 22개 기관

○ **신보・기보**가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

○ **분할・합병, 영업양도・양수**를 통한 사업전환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

* 사업전환기업에 대하여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등 각종 절차기간을 단축적용, 영업양수시 피양수기업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등

○ 기술・경영컨설팅,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 융자, 부지를 처분하여 설비 취득시 양도세 감면 등 지원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06.상)하여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2)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 시행

□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05.6.23일)을 차질없이 추진

○ 신용도, 이용기간·금액 등에 따라 **보증료 및 부분보증 비율**(현행 85%, 07년까지 80%로 점차 인하) **차등 운용** 확대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0.3%p 이내 차감) 및 부분보증비율을 우대 적용

○ **기술평가투자보증제도(CB, BW) 및 성과보증료** 확대 등 기술기업에 적합한 금융지원을 확충

○ **금융기관 출연률 인상(현행 0.3% → 06년 0.4%), 목표-성과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제고

□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05.6월)의 차질 없는 시행

○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구조를 개편**하고 신용도에 따른 **지원금리 차등화를 확대**

○ 기업스스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 ① 체증식(상환금액이 점차 증가) ② 매출액 변동식(상환 규모가 매출에 연동) ③ 현행 (일정기간 거치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력 있는 기업에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자금 재심제도' 본격 시행**

○ **상호저축은행 등**을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포함하고, 1억원 이하 대출신청에 대한 **간편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 편의제고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05년 1.4조원→06년 1.6조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매대금 회수 및 연쇄도산을 방지

(3) 중소벤처생태계의 건전성 강화와 금융관행 개선

□ 기술력과 신용도가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해 **신·기보의 연대입보 기준을 완화**

· (기술신용보증기금) 완전면제 (AAA→AA, 외감시 AA→A, 단 1인지분 30% 미만) 및 대표자·경영실권자만 입보 (A→BBB)하는 **최저신용등급 완화**

· (신용보증기금) 신용등급이 BBB- **이상일 경우**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등 기업 경영·지배에 직접 관련된 자로 한정

□ 이미 도입된 **분식회계「자진신고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유도**

○ 0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거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는 경우 감리면제를 시행중** (금감원 실무지침)

○ 자진신고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벤처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강화**

* 예 : 분식회계 자진신고 캠페인, 홍보자료 배포 등

□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유통을 활성화**

○ 증권선물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생산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에게 무료 제공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증권거래소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당해 기업과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

○ 벤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보의 벤처정보시스템을 활성화**

□ **충실한 기업공시 및 회계감사** 유도

○ 공시실적, 공시위반 경력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를 경감**

* 코스닥시장은 공시위반내용의 중요성, 공시지연정도 등을 감안하여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횟수를 일정비율 차등하여 적용

○ 코스닥시장에서 성실공시 기업 및 당해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표창제도를 신설**하여 상장기업의 성실공시를 유도

□ **벤처기업 CEO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관련 교육 강화

○ **서울·수도권 소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명경영 창립포럼(가칭)」을 개최**하고 지방으로 확산

* 투명경영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 회계전문가의 회계실무 및 윤리경영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병행

○ 벤처기업협회가 재무분석 및 종합진단 서비스가 가능한 **「위험경고시스템」을 개발·무료 보급하여 벤처기업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 06년부터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변경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차질없이 추진**

○ 벤처기업을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하여 **자기위험 부담으로 투자·보증·융자한 기술우수기업**"으로 정의

* 단, 「연구개발기업(R&D 5%이상)」 중 시장검증과 유사한 과정(예: 기술평가보증)을 통과한 **"외부 투·융자 가능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

(4)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사업**자금'** 등의 예산지원 대폭 확충

*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성공시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일정기간(2년이상) 구매(05년 100억 → 06년 160억)

**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우수기술을 제품화 하는데 소유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05년 59억 → 06년 90억)

○ 중소기업·연구기관이 기술·인력·자금을 상호 출자하여 **연구개발전문기업 공동 설립 추진**(06.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인력을 전문직군으로 육성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간의 네트워크 강화**(06.상)

□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부품·소재기술개발 이후 단계의 **사업화 촉진**과 부품·소재 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 기술개발자금(출연) : (05년) 1,600억원 → (06년) 1,800억원

* 설비자금(융자) : (05년) 600억원 → (06년) 732억원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산업육성 설비 투자 지원사업** (산업기반자금) **」**의 **연계를 강화**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설비투자를 위한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부품·소재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기업도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을 강화

○ 전자·자동차 등 7대 산업분야 210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 226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부품·소재 로드맵 수립**(06.2월)

(5)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창출 및 경쟁촉진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07.1월)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일정 물품은 **중소기업들만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의무화(06.1월 시행)

- **06년에는**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병행 실시**(대상품목은 상이)

- **07년부터는**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모두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대상품목으로 전환**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수주기회 확대

○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구매목표비율제 시행**

*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현재 3% 내외)하도록 하는 구매목표비율제 병행 시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대상기관 및 구매액 **지속 확대**

* 공공구매규모 : (05년)118개 기관,56조원 → (06년)120개 기관,56.5조원

○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구매 종합DB」** 구축·운영

* 구매기관과 중소기업간 쌍방향 구매·제품정보 제공 및 계약이행 능력 심사

○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 및 제도개선 추진

(6)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재경부(해외투자인포넷), 중기청(해외벤처넷), KOTRA, 수출입은행 등 **해외진출지원기관 사이트를 연결하는 포털사이트 구축**

○ 포털사이트내에 전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현지인력 Pool' 정보를 구축**

* 예시: 현지교포, 장기간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한 국내기업인, 한국기업 근무경험 또는 국내 산업연수생 경험이 있는 현지인 등

○ 수출업자간 정보교환을 위한 **자발적인 포럼구성 유도**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현지인프라 구축**

○ 세계 주요 경제권역별 중심지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

* (05년) 9개소 → (06년) 모스크바, 상해 등에 6개내외 신규설치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하여 해외진출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06.3월)

* (현재) 중국(북경, 상해, 청도) 3개소 → (확대) 중국(광주), 베트남(호치민)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관세 수출장벽을 해소

* (05년) 214억원, 3,600업체 → (06년) 200억원, 3,200업체

□ 수출보험기금의 **인수규모 확대 및 수출시장 변화에 대응한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 인수규모 : (05년) 74조원 → (06년) 83조원

○ 해외 플랜트 시장 개척을 위한 P/F 전담 조직 신설, 글로벌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형 포괄보험제도 도입** 등

3.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

(1)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강화

□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확보 추진

○ (법률)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위한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하여 법률시장 선진화 도모

*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06년)하여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변호사 및 외국로펌의 등록, 자격요건, 사무소 설립요건, 명칭 등을 규정

○ (컨설팅)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쿠폰제 경영컨설팅」제도 활성화**

* 예산지원 확대 : (05) 150억원 → (06년) 186억원

○ (디자인) 우수한 디자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디자인기술개발사업**중 **중장기 대형사업 확충**

*「선도디자인확산사업 신설(06년 20억원) 및「일류상품디자인브랜드개발사업」확대(05년 20억원 → 06년 30억원)

○ (방송·광고) **외주활성화***를 통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시장을 육성**하고 **가상, 중간, 간접 방송광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외주제작비율개선, 외주제작 인정기준과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 등

○ (유통) 중소유통분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확대**

* 06년중 대전, 군산 등 4개 지역에 69억원 국고 지원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주요 공공부문 발주처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하여 **기술 중심의 계약제도 활성화**

*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입찰업체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위 순위업체부터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제도

- 건설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및 **건설사업관리(CM)** 등 제도개선 추진

○ **(보석·귀금속)** 보석·귀금속 산업이 **사치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음성화된 유통구조를 양성화**하여 **고용창출·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귀금속분야 RFID 시범사업 실시, 귀금속·보석분야 양성화를 위한 세제 보완 등

□ 06년초 대외경제위원회를 개최,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 확정**

○ **교육·의료 분야 등 현 개방계획 수준이 미흡한 분야는** 공공성에 대한 보완대책 검토와 함께 **진전된 로드맵 마련**

(2) 문화·관광 서비스업 발전

□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하여 해외 여가 수요의 국내전환 유도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광레저형 지역특구**의 추가지정 등을 검토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태안, 무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지역특구) : 8곳

○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고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적용 추진**

* 카지노사업 인허가 등 관리권한을 문광부에서 제주도로 이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중 제주도 발생분은 제주도에 전출

○ **해외 골프 관광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공공형 대중골프장 건설 추진**

(3)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서비스업의 경쟁력 분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서비스업 경쟁력 분석) 서비스업의 현황과 경쟁력 분석을 위해 06년중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 실시

* 총조사 결과는 향후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에 활용

○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운수,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주요 서비스 산업별로 생산성 실태조사 실시하여 대책 수립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Indicator)를 개발·운영

* 06년초 서비스산업별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정책의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산업 정책발굴에 활용

□ 서비스업의 변화를 쉽게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년주기의 서비스업 통계제도 개선

○ (현행) 11개 서비스업* 통계 작성 → (개선) 11개 서비스업을 업종별로 각각 세분화**하여 통계 작성

* 부동산임대, 사업, 오락문화, 보건복지, 도소매, 음식·숙박, 통신, 금융, 교육 등

** (예시) 오락문화서비스업 : 일반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텔레비전 방송업, 공연시설 운영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및 동물원,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

(4) 사회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유도

□ **확대된 교육기회**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한 교육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수요자의 요구 반영**

○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교수 확대** 등을 통해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조속히 **제정**

* 01.4월 초중등교육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 법령미비상태 지속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제주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

* 송도국제학교(미 ISS사와 MOU체결, 2,100명 규모)의 차질없는 설립 추진

□ 다양화·고급화된 **국민의 의료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등 의료자원의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료비용 급증방지 방안 마련**

* 병원채 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 공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층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의료 관련 제도 재검토

○ 임상시험 등 의료분야 신기술 허가·심사제도,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e-health) 구축 등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의료관련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4. 핵심 전문인력의 공급확대

□ **범부처 협력**을 통해 창조적인 **이공계 전문인력**을 육성

○ KAIST내에 **학제연구·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 이해력을 갖춘 **다학제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양성

○ 06년부터 추진할 **제2단계 BK21 사업***에서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고, **이공계 교육과정에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 유도

* 06~12년간 추진, 1단계보다 연 지원예산 증액(2,000→3,000억원)

○ **학자금 대출, 공직 진출** 등에서 **이공계 우대**

□ **외국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를 개선

○ 전문인력의 **사증발급 대상**에 대한 **업종분류를 세분화**

- 관련부처 고용추천서 발급대상·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 투명성 제고

○ Gold Card **소지자** 등의 **복수사증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무인자동심사대'** 등 외국전문인력 **출입국 절차 간소화**

○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국적부여 요건 완화**를 검토

□ 일관된 **산업별·직업별 국가인력수급전망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정비**

* 전망전담조직 설치 및 실시기관 선정, 직업분류체계 표준화, 기초통계 확충 등

□ 이공계 등 **전문인력 육성의 거점**인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

○ **「국립대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정원 조정 유도**

5. 연구개발 확충 및 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본격 시행(06.상)

○ 연구개발 종료 후 2년간 사업별 성과활용현황을 조사·평가하는 **성과활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미활용 기술의 이전 촉진

○ 연구성과의 종합적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06.3/4)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 연구개발성과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투자 확대

○ **기초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술혁신 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역량을 배양

* 정부 연구개발투자 중 기초연구개발 비중
: (05년) 21.5%(1.4조원) → (06년) 23.7%(1.7조원) → (07년) 25%

- 특정기초, 우수 연구 집단 육성 및 최고과학자 등 **창의적 혁신 역량 확충을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추진

* (05년) 1,870억원 → (06년) 2,058억원

□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산자부·특허청·균형위 공동으로 **커넥트 코리아**(Connect-Korea) **사업** 추진

- 전국 권역별 **거점대학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조직을 선별·지원하고, 대학 등의 **특허경비** 및 **특허전문가 파견** 지원

- 테크노파크에 **지역기술이전센터**를 구축하고, **해외기술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기술시장 정보, 협상 등 지원

○ **산학협력촉진법** 개정 등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식회사** 형태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산학협력을 위한 **외부자본 유치**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대학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등 **자금관리 및 회계제도 정비**

○ **대학·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교지·연구소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주체, 공장소유권, 공장규모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고(벤처특별법 개정, 06.상)

- 농지·초지·산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예)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美),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英), 칭화대(中)

□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의 육성, 대덕벤처투자펀드 조성, 외국기업 단지 조성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본격 시행**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을 위해 시범 산업단지*에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확대**

* 7개 시범산업단지 : 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시화, 원주, 군산

□ **경제의 IT화 촉진**을 통해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제고

○ u-City 활성화를 위해 「**u-City 건설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u-City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Wibro**(06.4월), **지역지상파DMB**(06년말) 등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의 상용서비스 개시

○ 청소·교육·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100만원대 국민로봇 보급**(06.10월)

○ IT839전략에 따라 도출된 200개 부품 중 78개 기술 개발, IT SoC(System on Chip) 산업지원 강화 등 **IT부품·소재산업 육성**

□ 기술혁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

○ 「**전략적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가칭)」 수립·시행(06.하)

○ 정부 **R&D 과제 기획단계에서의 선행특허조사를 확대**하여 원천특허 확보노력 강화

* 선행특허조사 지원과제수
- 중장기·대형과제(개): (05년)40→(09년)250, 단기과제: (05년)450→(09년)1,000

○ **국제 특허 분쟁에 대한 역량 강화**와 실효성있는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전개**

- '특허지원센터(전자산업진흥회)'에 **특허분쟁 신문고 제도 및 실시간 탐지체제 운영** 등으로 초기 대응체계 구축

- 특허분쟁이 급증하는 IT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특허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허멘토링 지원

- 「**주중지식재산권전담조직(IP China)**」 **설립**(05.12월) 등을 통해 중국 현지의 지재권 조사 및 분쟁 대응

Ⅲ.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1.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급대상자 확대**(143→162만명)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130%이하

○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06년 6만회)

○ **차상위 계층 18세미만 아동(8.7만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도입**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3.5→8만명)

○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

* 실비요양시설 100개소, 그룹홈 155개소, 소규모다기능시설 65개소 신설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인상**(월6→7만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을 대폭 확충**(18→62개소)

- 이와 함께 LPG 차량을 보유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 LPG 보조금(06년 2,415억원)의 합리적 개편 추진**

□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주택전세자금 지원(1.6조원) 지속**

* 매입임대 : 연간 2,000호 → 연간 4,500호(15년까지 총 5만호) 공급
* 전세임대 : 연간 1,000호(15년까지 총 1만호 공급)

2.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체제 강화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납부할 소득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근로 빈곤층에게 차액(납부할 소득세액 - 세액공제액) 만큼 세금을 환급
*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일정수준까지 환급액이 증가

○ **07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06년에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입법마련

* 07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8년부터 지급
* 도입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계층을 중심으로 운용

□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을 확대**(6만명→7만명)하고, 근로형태를 단순한 근로유지형에서 **시장진입형 사업* 위주로 전환**

* 집수리, 폐자원 활용 등 정부투입 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2~3년)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

○ **자활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통해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활동 강화**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시범도입 검토**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매칭펀드 지원(정부 + 민간기부금)

○ **휴면예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 (Microcredit)* 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

* 다른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06년 20억원)과 연계

3. 고용창출 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강화

(1) 고용창출 기회 확대

□ 수익 창출가능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을 실시**(60억원)

○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인증, 지원방안 등을 담은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업 육성**

○ **고용안정센터**를 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개편**

* 지자체·대학·민간 등과 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연계 확대

○ **우수 민간기관 인증**, 취약계층 취업지원업무의 **민간위탁 시범실시, 민-관 고용 정보망 연계** 등 민간고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실업자·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

○ **훈련컨소시움**의 지속적 **확대**(05년 47개 → 06년 60개), **학습조직화** 촉진 및 대기업 등의 **HRD 우수과정 연계수강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 비정규직에 대한 사업주 훈련시 훈련비외 **임금 일부 보조, 수강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등 훈련상 우대조치 현실화

○ 실업자 **직업훈련비 현실화** 및 **훈련상담** 강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직훈련** 실시(06년 5,000명, 62억원)

○ **민간직업훈련기관** 활성화, 훈련비 지원체계 개선, 근로자 **훈련계좌제** 시범실시(06.하)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

(2) 청년실업 대책

□ 학교와 노동시장간 이행성 강화

○ 초·중·고생에 대한 직업특강, 직업적성·흥미검사, 현장체험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

○ **대학별·학과별 취업률을 공표**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노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유도

○ **"대학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 실시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06년 100억원, 공모심사로 지원대학 선정)

□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장기실업 청년층에 대해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추진

* "개인별 상담 → 직업훈련 등 개별 사업 참여 → 집중 취업알선"이 연계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06년중 시범실시)

○ **고졸 청년층의 실업실태 및 원인 분석, 특화사업 개발** 등을 통해 고졸이하 청년층에 특화된 고용촉진방안 마련

* 06년 상반기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T/F 운영, 연구용역 추진 등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민간기업 연수기회 확대, 연수전 사전교육 실시, 사업간 연계 강화 등 내실화 추진

□ 인력수급 정보인프라 확충

○ 청년층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해 **국가인력수급전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 기초통계 확충, 직업분류체계 표준화, 전망전담조직 설치 및 실시기관 선정 등

○ **청년 구직자 DB**를 활용하여 취업알선·훈련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노동시장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4.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개정**(06.상) **등을 통해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 재래시장과 인접상점가를 묶어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

○ 재래시장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시장정비사업시 **국·공유지 수의매각 허용** 등 **상인부담 완화**

○ 재개발, 재건축 등 **시장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06.상)

- 전국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조사 결과**(05.12월)를 토대로 상권 활성화 가능성에 따라 **시장 특성별 지원방안 마련**

○ 06년 발행예정인 **광역단위 재래시장 상품권**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요 창출***

* 정부나 공기업이 **직원 포상시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 등

□ 자영업 **컨설팅사업 체제의 내실화**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을 지원**

○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한 **특화된 컨설팅지원 활성화** 및 **컨설팅 인력Pool 확대·운영**

○ 교육과 자금을 연계한 **「5단계*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자에게 **지역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 ①컨설팅 → ②교육 → ③현장실습 → ④자금관리 → ⑤사후관리

□ **경제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는 **생계형서비스 종사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특성별 종합컨설팅지원센터」**로 개편

5.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 **비정규직 입법 완료시** 하위법령 제·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원활한 법시행 여건 조성**

○ 노사단체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위원·심사관 증원, 전문위원 채용 등 추진(노동위원회 개편방안과 연계)

○ 비정규직 관련법의 주요내용, 차별시정 절차 등에 관한 설명자료 제작·배포, 설명회 개최 등 **집중적인 교육·홍보 실시**

□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06.상)

○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 고용 개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조치 등을 적극 추진

□ **취약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할인매장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공공부문 취약사업장, 불법파견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용관행 정착**을 유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06.상)

○ 노사정간 실질적 논의를 거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관리체계 마련**

* 총괄담당 : 정부부문(행정자치부), 공기업·산하기관(기획예산처)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1) 상생협력 정책과제의 확대 추진

□ 대·중소기업간 **기술·인력 교류 촉진 및 자금지원** 확대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 유도 (05년 26개 → 06년 35개)

○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확대

○ 중소기업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확충**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Network loan을 활용토록 유도**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사례* 확산 유도**

* SK텔레콤은 05.12월 신보에 2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신보는 동 재원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이 추천하는 100여개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증 제공

□ **성과공유제의 확산**

○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에 성과공유제 확산**

○ 전자 업종 등 주요 업종별로 **성과공유 모델 및 표준성과 계약서 개발**을 추진

□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

○ **대기업 협력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 계량적 지표개발, 대기업 지원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협력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공정위 하도급 서면조사 면제, 공공조달 우대 등)

○ **지역순회 협력포럼 개최, 우수 사례집 발간, 언론사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기획시리즈 연재**를 지속적으로 추진

(2)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 상생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대형·중소유통업체 및 지자체 관계자간 **유통업상생 협의회**를 구축하여 상호협력을 유도

○ **대형유통업체의 전문지식**을 중소유통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대형유통점과 우수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시 중소납품 업체의 동반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

□ 우수 상생협력기업 포상 등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의 **상생발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유통대상 등 포상 추진**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간의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지역별 등반대회·체육행사 등 개최

□ 대·중소유통업체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유도

○ 거래중단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등 신고시 포상금 지급(05.4.1일 시행)

○ 영세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확대**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대상**을 **유통, 광고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제조·건설 : 5만개→6만개, 서비스 : 신규 15만개)

□ 대형 유통점과 납품업체간의 **공급망관리(SCM) 협력 파트너쉽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지원확대

○ 유통분야의 Network loan **활용 확대를 유도**

7.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본격 추진

(1)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 06년에 토지매수를 본격화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06.7월)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맞추어 **개발계획·실시계획 등을 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연기·공주지역에 개청(06.1월)하여 본격적인 사업시행

□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후속조치 및 추가 지정 추진**

○ 05년에 선정된 6개 시범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및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

* ① 산업교역형(1) : 무안 ② 지식기반형(2개) : 충주, 원주
③ 관광레저형(3) : 태안, 무주, 해남·영암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착공은 07년 상반기 예정

○ 신규 기업도시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 추가 지정을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지속 추진**

○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완료된 시도별로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 이행,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남게 되는 부지(98개 기관, 296만평) 및 시설의 활용기준 마련**

(2)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국내외 농업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 재검토**

○ 06.2월 중 **쌀, 과수산업 위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06년 하반기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

□ **농업회계기준 마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등 **농업경영체의 활성화** 기반 조성

○ **영농규모화 및 부채농가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본격적 추진 (06년 : 277ha, 422억)

□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쌀 민간유통기능 강화, 공공비축제 보완** 등 **쌀산업의 시장기능 정착** 유도

○ **수입쌀 소비자 시판**(06.3월)에 대비한 **양곡유통 투명성 제고**

□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및 자율관리어업 확대(96억원)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222억원), 어선감척(534억원) 등

□ **물류 효율화, 고품질화, 농수산물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06년 25억불 농산물 수출 목표)

○ **산지유통센터 확충**(442억원), **농산물생산유통종합시스템 구축**(20억) 등 **물류효율화** 추진

○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및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등 **인증 획득 지원**

○ 수출 농수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상품화** 지원 및 **농수산물 무역정보망**(KATI)을 활용한 **수출지원정보 제공** 등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농림어업인의 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 활성화**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지속 추진(06년 시행계획 수립)

○ 도시인의 농어촌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

Ⅳ.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1. 금융시스템 개혁

(1) 금융규제 개혁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

□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은행 육성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율**(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을 적용

○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

○ **신종 금융상품의 설계·취급**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 규율방식을 도입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 **금융규제개혁 시스템의 상시적 가동**을 통해 금융규제 개혁의 규제 체감도와 실효성을 제고

○ 1단계로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방안**(05.11월)」의 개선과제(101개)는 **06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령 개정(19개) 등 추진

○ 「**2단계 금융규제개혁**」은 규제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규제 기능별 측면(예 : 벌칙등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집중 재검토

- 이와 함께 실효성 상실 규제, 중복·과잉규제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복잡한 금융상품**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

○ 금융상품 판매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고지의무 부과 및 분쟁발생시 책임분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

(2) 금융중개 기능의 효율화

□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다양화·확대

○ 신용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여 은행대출의 **위험분담수단**을 확충하고 **자본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

○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메자닌 파이낸싱**(Mezzannine Financing*) 등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

*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정금리 이외에 사업성공시 보수(추가금리 또는 주식)를 추가로 받는 금융상품

○ 일반투자자·연기금·보험사·창투사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투자를 촉진**

- 투자의무비율 등 PEF 운용상 규제를 완화하여 시중 유동자금이 기업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유도

○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ABS시장 활성화를 추진

* (현행) BBB이상 기업 → (확대) 연기금, 공기업, BB이상 기업

□ **대규모 재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발·붕괴 등 인위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보험을 도입**

○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보험의 가입대상 건물을 확대

* 공유건물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중 가입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종합여객시설, 집회시설 등)을 특수건물에 추가

(3)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 신용정보인프라 종합개선방안 마련

○ 신용정보 활용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

○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낮은 신용정보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Do-Not-Call(전화수신거부) 제도 도입, 고객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장치도 함께 강화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 **청산결제기능의 효율성** 제고, **관련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통합** 추진 등을 통해 **증권·선물시장**의 **운영체제 효율성을 제고**

○ 장기 지표금리의 형성을 유도하고 회사채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장기 회사채발행 활성화**

- 채권대차시장 참가자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거래시스템을 효율화함으로써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

○ 우리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회계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기업회계 제도를 선진화**

□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유도

○ **금융업권간*, 생·손보간 업무 구분을 완화**하여 보험사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경쟁 기반을 마련

* 은행·보험·증권간 분업주의를 유지하는 정책의 틀 안에서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

○ **보험상품과 영업 등에 대한 규제**를 유사 상품 등을 취급 중인 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완화**

○ **자본시장 통합법 체제**에 맞춰 **보험업법 체계를 정비**

□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제도를 정비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

(4)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

○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강화** 및 수준별 **조기경보시스템 본격가동**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체제 정착** 및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효율화** 등 **선진금융감독체제 구축 지속 추진**

○ **신BIS협약 도입**에 따라 은행별로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점검·지도

- 동 협약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선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

□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영업력 확충을 도모**

* 상호저축은행 단축명칭 허용, 국고금 취급기반 마련 등

○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취급업무 확대 등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를 유도**

○ 대부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강화, 서민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

○ 한편, **신협중앙회**의 자구노력 등 **정상화방안을 마련**

(5)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및 심사분석 역량 강화

□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을 적극 추진**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 89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호주, 영국 등 31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

○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 등을 통해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국제기준 이행수준을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06년 **FATF총회**(06.2월, 6월, 10월)에서 **한국 가입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 노력을 전개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주의의무제도(CDD) 정착**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 **고객주의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축적된 **CTR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의 혐의거래 및 외국환거래 자료와 연계한 **전략적 심사분석을 적극 활성화**

※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06.1.18일 시행)
: 5천만원 이상 고액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 06.1.18일 시행)
: 계좌의 신규개설 등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거래목적 등을 확인

2.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

(1) 세제 선진화

□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제고 방안 추진

○ B2B 거래에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 확대, 장부기장 유도 등 **거래증빙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 B2C 거래에서는 **현금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제도화

* (예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등

○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국세청**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기관간 소득자료 정보공유 및** 수입금액명세서 등 **과세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

□ 납세 편의 제고 및 세제의 효율화

○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제도*를 양도신고 확인제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비거주자가 국내의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다음달 10일까지)하는 제도

** 부동산등기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 **유가보조금 지급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택시의 경우** 연간 지급한도액 설정,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 등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시스템 간소화 추진**

- **화물차의 경우 유가보조금 카드제 전면도입 방안 검토**

□ 과세형평성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정비

○ 국민의 조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이전에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

○ 06년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분석하여 연장여부 검토

○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 규정 신설 추진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후환급 제도로 전환

□ 조세체계의 선진화·국제화

○ 공동사업자의 범위, 설립과 출자, 손익 할당 및 해산 등 공동사업과세제도 개선방안 마련(06년중)으로 파트너쉽 과세 도입기반 확충

*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방식 검토

○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비 방안 마련(06.상)

-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수익의 구분, 수입시기 등의 단순화·명확화를 통한 간접투자기구 활성화를 지원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조세회피지역 외국자본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절차규정 제도 보완** 및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 협정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제도 개선**

○ DDA협상 등 **세계적인 관세인하 추세,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추진**

-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품목간 세율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개선과제 우선 보완

- DDA협상 종료(06년말 예정) 이후에 **중심관세율 인하 등 대폭적인 개편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 주요국 평균관세율(%) : 한국(8.6), 미국(3.1), EU(3.1), 일본(2.5)

○ **개성공단 생산의 본격화**, 남북철도 개통 및 대북 전력 공급 등 새로운 남북교역 환경에 대비한 **관세통관 특례제도 도입**

- 북측과의 품목분류·원산지 등 **관세제도 표준화 방안**도 추진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및 방콕협정* 제4라운드 협상 참여 등 **개도국과의 관세협력 강화**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한국, 중국, 인도 등 6개국)

(2)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 경제·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선진화를 위한 제도·법령정비를 추진**

○ 재정자금 운용, 재정수지·국가채무 관리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거시경제여건, 금융정책 등과의 조화를 도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재특회계통합), 국채관련 법령 등 정비

○ 단년도 통제위주의 재정운영방식을 중장기·성과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

□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

- 국가채무의 위험분석 및 대응, 국가채무 상환계획 등 마련

○ 국가채무관리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국가채무관리위원회, 국가채무관리기구(DMO) 등 설치 방안 검토

□ 재정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

○ 재정자금의 장기·저비용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20년물 국고채 발행 추진**

○ 국채수요기반 확충·유동성 제고를 위해 RP 등 연계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06년 상반기중 국채 Strips 제도*를 도입**

* 국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국유지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제고**

○ 국유재산 관리의 기초가 되는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06년까지 조기 완료**(당초 계획 05~07년)

* 05년까지 25만필지 조사 완료, 06년중 45만필지 조사 예정

- **행정재산**도 06년부터 전수실태조사를 관리청별로 실시

* 관리청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6.1월부터 착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08년 도입예정인 발생주의회계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결과 파악되는 무단점유, 유휴지는 **민간 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에 위탁하여 관리**

○ 국유지 **개발방식**을 임대형·분양형·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특성에 맞는 개발**을 뒷받침

* 현재 신탁개발은 임대형·분양형만, 위탁개발은 임대형만 허용

○ **국유재산 임대체계를 전면 재점검·정비**하여 국고수입 확충 및 활용도 제고 (06년 상반기중 용역 발주)

○ 총괄조정기능 및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관리조직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국유재산관리청, 국유재산관리공단 등 그간 제기된 모든 방안을 검토

□ 공기업의 민영화 지속 추진 및 적정배당 유도

○ **민영화법 적용대상**인 3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을 평가

* 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기업의 법정 적립금 및 필요 투자재원 등 공공성 유지를 위한 **내부유보는 인정**하되, 가능한 한 **적정배당**을 유도

□ 08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 시험운용대상을 **전부처로 확대**(05년 12개 부처)하고 토지 등 **국가자산·부채에 관한 실사 실시**

○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의 근거가 될 **국가회계법 제정** 추진

□ 정부공사 등의 **입찰·보증제도 개선 및 감리·감독 강화** 추진

○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시행**

○ 공사비 절감사유 심사 등 **저가심의제의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보증심사기능 강화

○ 감리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 강화 추진

○ 품질·가격을 함께 반영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에도 역점

□ 국가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 구축**

○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 구축**(07년 운영)

* 현재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예산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기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관리·원가관리기능을 도입

- 국가의 재정운용 현황과 재정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재정통계 분석기능을 강화**

○ **조기결산체계**를 정착시켜 결산정보가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결산의 환류(Feedback) 기능을 제고

* 정부결산 국회제출(법상 9.2일)
: (03년결산)04.8.6일→(04년결산)05.7.27일→(05년결산)06.6.30일 목표

(3) 가격보조금 등 보조금 제도 합리화

□ 주요국이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일률적인 가격보조에서 수요자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추어

○ **우리의 경우**에도 **가격보조방식에서** 저소득층 등 보조금 대상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개편을 통해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추진**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05.7월) 등 일부 보조금 제도는 旣개편

< 검토대상 보조금 >

① **연탄에 대한 가격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 추진**

- **연탄최고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연탄제조업체에 대한 가격보조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 마련

* 연탄보조금(억원) : (04) 517 → (05) 944

② **장애인LPG보조금을 교통수당 차등지급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 장애인 LPG 보조금(억원) : (02) 608 → (04) 2,189 → (05) 2,458

-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보조금 차등지급기준 마련**

③ **보육서비스제고를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와 더불어, **수요자에 대한 차등보육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계획 : (05)평균소득의 60%이하계층 →(09)130%이하

(4) 기금·공기업 혁신

□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강화로 방만경영 방지

○ 내·외부 견제 및 평가시스템 개선 등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 **국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에 의한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 표준화된 경영정보 이외에 인건비, 채용정보, 계약정보, 경영평가 등 **실시간 경영정보를 확대 제공**

○ 공공기관 **경영혁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각종 **혁신제도****를 정착·발전

* 고객·윤리·효율·성과·인프라 등 테마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학습조직 등 운영

**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공개(06.6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개(06.12월)

□ 기금과 특별회계 정비, 부담금 정비 지속

○ **특별회계·기금 정비안**이 07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및 폐지안의 입법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

○ **102개 부담금에 대한 운용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은 지속 정비

(5) 국가통계 개선

□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통계 개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국가통계위원회 위상과 역할 강화, 통계개발원 설치**(통계청) 등을 통해 국가통계 개발·개선 추진체계를 확립

* 통계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통계청장에서 경제부총리로 격상하고 통계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능 부여

○ 수요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 **연도별 통계 개발·개선계획**(06~08년)을 차질 없이 추진

* 경제통계 : 국부통계추계, 가계자산통계 등 57종의 통계 개발·개선
* 사회통계 : 사회복지시설 운영통계, 인력실태조사 등 26종의 통계 개발·개선

□ 국가통계 전체에 대해 **품질진단을 확대 실시**하고 **통계체제를 정비**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 제고

○ 06년부터 5년마다 **모든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

* 3개년간 품질진단 추진계획(통계수) : (06년)105→(07년)173→(08년)175

○ 매년 통계작성실태를 점검하여 **유사·중복통계를 통폐합**

○ 통계목적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통계작성에 국세, 연금 등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법을 개정

□ **국가통계정보 통합 DB를 확대 구축**하고 네이버 등 포탈 사이트와의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3. 선진적 노사관계 기반 확립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노사관계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변화된 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

- 비정규직 입법 처리 후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

  * 주요내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직권중재제도 및 긴급조정제도 합리화, 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구제절차 다양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모델 개발·확산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추진**

  * 임금직무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컨설팅 실시 등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대응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노사 당사자간 자율해결 능력 제고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확충하여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규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추진

□ **노사정대화체제 정상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임금안정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구축

4. 공정경쟁촉진 및 소비자주권 강화

(1)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

□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토대 구축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감시분야로 선정**하여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

○ **기업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한 규제개혁 산업 및 과제 선정 등 **수요자 중심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지속 추진**

□ **시장 자율규제시스템의 강화**

○ 최근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 **私人의 금지청구제도*, 공정거래법상 조정제도** 등 민간의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도입 검토

* 개인이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민관합동의 T/F를 구성*하여 Post-로드맵의 정책을 제시

○ **대기업집단정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재경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재계 및 각계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추진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과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완화방안 검토**

*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등

(2) 소비자 주권 및 국제협력 강화

□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비자기본계획 수립절차, 일괄적 분쟁조정제도의 대상 및 절차, 단체소송제기 단체 요건, 안전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검사권 등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기능보완(안) 마련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민·관 공동 위원장, 재경부, 공정위 공동 간사제 도입 등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분쟁발생·피해구제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 소비자 안전 및 지방, 국제소비자협력 강화

○ 소비자안전지수를 측정하여 소비자안전정책의 성과·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 제71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한국 개최(06.3월)를 계기로 소비자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 OECD 30개국 회원국 및 아시아 비회원국(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대표 등 약 80여명 참석

○ 증대되는 국제소비자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분쟁처리지침 제정

○ 05년 처음 실시된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지방소비자행정 비교·평가 연례화 추진

5.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1) FTA 확대 및 DDA협상 내실화

□ 예정된 FTA 협상과 공동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산업별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외개방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 한·EFTA* FTA 06년 하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ASEAN·캐나다와의 협상을 마무리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쉬타인

○ 일본, 멕시코, 인도, 메르코수르*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미국과는 국내여건과 개방효과에 대한 종합점검을 토대로 FTA 본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

*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이와 함께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부문별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DDA 협상*에 대해 주요 분야별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 05.12월 홍콩각료 회의에서는 06년말 타결을 목표로 06.4월 협상 세부원칙 마련, 06.7월 국별이행 계획서 제출일정에 합의

○ 농업협상은 G10(수입국), G33(특별품목그룹)과의 공조를 통해 점진적인 시장개방과 신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

○ 비농산물·서비스협상은 우리의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감안,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및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 규범협상에서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한 협정개정에 노력

(2)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강화

□ 06년 출범하는『**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화를 추구

○ **국가별·분야별·지역별 지원전략을 수립·시행**함으로써 ODA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에 대한 **지역연구를 강화**하고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EDCF를 통한 대개도국 경협증진·시장진출 및 자원확보 추진

○ 한·ASEAN FTA 추진 등과 연계하여 **아시아 지원비중*을 제고**하고, **자원부국·신흥시장 등을 중점 지원**

* 아시아지역 EDCF 지원비중 : (01~05년) 58% → (06~09년) 70%

○ 베트남·인니 등 주요지원국에 대하여 **국가별로 차별화된 3~4년 단위의『국별협력전략계획』을 수립·시행**

* 개도국이 수립한 경제개발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3~4개년에 걸쳐 중점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효과를 극대화

○ 시스템통합(SI)·교육·환경·의료·에너지 등 **성장동력 산업 분야를 중점지원**하여 **국내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 정부간 협정 절차를 개선하여 EDCF **지원소요기간을 단축**

* 지원소요기간 (승인~차관계약) : (종전) 9.4개월 → (개선) 3개월

(3) 중동지역·BRICs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해외자원 개발

□ 중동지역의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중동 플랜트·건설 수주지원센타(두바이)」 설치 등을 통한 현지 밀착지원 및 On-Line을 통한 발주정보 실시간 제공 확대

* 쿠웨이트·UAE 등과 건설협력 MOU를 체결하고, 인력풀 운영, 인력양성교육·훈련 실시 등 추진

○ 석유·가스 탐사 개발사업 등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플랜트 수주 지원 강화

○ 해외건설펀드(PEF)를 설립하고, 전문 공기업과 해외 건설업체간 합작 수주를 추진

* 해외건설수주 규모(억불): (03년)37→(04년)75→(05년)107→(06년)120

○ 발주처에의 벤더등록 및 플랜트 기자재 공급 강화

□ 중동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수요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전담무역관을 지정하여 전문마케팅 및 A/S 제공

○ 중동지역 소재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타 확충 등을 통한 소량·다품종 수요에 대응

○ 아랍어 웹사이트 운영 등 적극적인 문화마케팅 전개

□ BRICs 관련 정보의 축적을 체계화하고,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

○ BRICs 관련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제공하는 통합적 「Information Center」 구축

○ 각 국제대학원을 BRICs 국가 및 지역별로 세분화·특화하여 효율적인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유도**

○ **범부처 차원의 「BRICs 협력 지원반*」을 구성**하여 반기별로(1회 이상) 진출전략 협의 및 애로사항 해소

* 재경부(경협총괄)·교육부·과기부·외교부·문화부·산자부 등

○ 수출입은행을 통해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BRICs 진출을 위한 **수출·해외투자 금융을 적극 지원**

□ **경제협력 협의채널 확대·강화**

○ 중동지역에 대한 **정부간 자원 및 IT분야 등 협력약정 체결과 인적교류 확대**

- 민간차원에서는 **「對중동 민간교류협력위원회」**구성·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제3국 공동 진출 등 협력 확대

○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를 신설**(06.5월)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러 경제공동위를 지속적으로 추진

○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협정(CEPA)",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협정 체결 추진

□ **해외자원개발협력 확대** 및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

* 06년 신규사업 : 러(캄차카 육상 14억b, 사할린III 5억b), 카자흐(주반땀 2.5억b), 나이지리아(2개광구, 20억b), 예멘(3개광구, 15억b)

○ 자원개발기업, 전력·플랜트·건설업체 등으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개발·에너지 인프라 **동반진출 촉진**

(4) 국제 금융협력의 내실화와 주도적 역할 강화

□ ASEAN+3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역내 금융협력 주도**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집단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역내 합의 주도

○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화 방안 마련, 아국의 인프라 전파 등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 **동아시아 통화통합 등** 역내 경제통합 논의의 본격화에 대비, 아국의 실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 모색**

□ **다자간·양자간 금융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 APEC, ASEM,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 논의의 장을 아국의 역할 제고**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

○ 한·미/한·일/한·인도 재무장관회의 정례화, BRICs 및 ASEAN 국가들과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Global network 형성

□ IMF·세계은행 이사국으로서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역할 강화**

○ **선진 24개국 재무장관의 협의체**인 IMFC/DC 회의에 참석, 국제금융 주요이슈에 대한 **실질적 정책 논의 참여**

○ **IMF 쿼타 증액***의 **실질적 성과 진전**을 위해 미·일·중·호주 등과의 **공동 노력 강화 및 입체적 협의채널 구축**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11위인 반면, IMF 쿼타는 28위로 저평가되어 있는 실정

○ 한·호주에 이어 **한·뉴질랜드 국제금융분야 협력회의를 신설**하여 같은 그룹내 공조 활동을 강화

○ **국제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국제기구 신탁기금 활용**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

* 필요시 우리의 비교우위사업 중심으로 비구속성(Untied) 차관 활용

- **5대 국제개발은행*과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Annual Consultation**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사업수주 기회 지원

* 5대 국제개발은행: IBRD, ADB, IDB, EBRD, AFDB

- **IDB내 아국 신탁기금**(1억4천만불 기조성)을 우리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

- 상반기 **ADB**「e-Asia & Knowledge Partnership Fund」**에 출연**을 완료하여 우리기업의 사업진출 기반 마련

(5) APEC 역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 05년 APEC 정상회의시 우리나라는 **06년부터 역내 사회·경제적 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 연구** 개시를 제안

○ APEC의 2대 축*인 **경제기술협력(ECOTECH) 분야의 중점 사업**으로 제안국인 우리나라가 연구를 주도

*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 경제기술협력

○ 양극화 방지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연구 주제 및 작업계획을 마련하여 06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 제출** 예정

6.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현

(1) 금융시장의 국제화

□ 동북아 금융허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 금융허브 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 (06년 상반기 국회 상정)

* 금융허브조성및발전에관한기본법(가칭) 주요내용 : 금융허브 추진체계, 금융허브 조성의 지원, 규제 투명성·일관성 제고 등

○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금융허브추진위원회」**(위원장:경제부총리)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참여를 활용**하고 추진동력을 확보

- **민간위원 중심의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

* 금융규제개선, 선도금융부문혁신, 금융감독혁신, 외환제도선진화, 금융허브전략, 금융전문인력양성 분과위원회

- 금융허브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간 효율적 업무조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금융허브정책을 추진

□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의 한국 진출을 촉진**

○ 외국금융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및 한국투자공사 등을 활용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활동 강화**

○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지원과 고충 처리를 위한 One-Stop Service를 제공

□ 금융의 겸업화·국제화 등 금융환경 변화와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06년 3월 출범을 목표로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의 토대 마련

□ 자산운용업 등 **선도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 KIC 설립(05.7월), 퇴직연금제 시행(05.12월)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업의 중심의 허브화**를 촉진

○ **외국인의 채권 투자와 아리랑본드 발행**여건을 개선하여 채권시장의 수요·공급기반을 다변화하고 국제화를 추진

○ **동북아 역내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동북아 역내 리더쉽 구축을 위해 노력**

○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외국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등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제화**를 추진

○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자본시장 제도** 등을 기반으로 **역내 개도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 향후 **동북아지역의 대규모 개발 인프라 투자**에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

(2) 외환시장 안정 기반 강화 및 외환제도 선진화 추진

□ 외환시장의 안정 기반 강화

○ **해외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외환수급의 균형기조 정착**을 도모

○ **외환파생거래의 활성화, 시장호가제도 개선** 등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심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지속 추진**

○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 유지, 대외순채권 기조 지속 등 **대외부문 건전성의 안정적 유지**

□ 외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 제고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02.4월)에 따른 **외환자유화 계획***을 재검토하여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는 방안 검토**

* 기존 외환자유화 일정: 2단계(06～08년), 3단계(09～11년)

- 기업경제활동 또는 외환시장 발전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외환규제는 조속히 폐지·완화**

- 외환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인 **원화 국제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검토**

○ **'외환거래 모니터링·감독체계 강화 방안'**(05.11월 기발표)에 따라 06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된 주요 자본거래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본격 가동**

- 외환전산망을 통한 특별관리시스템, 외환시장 안정협의회 등을 활용, **유관기관 공동의 외환거래 감독 강화** 등

(3)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전문성 제고(06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활성화,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으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및 개발 가속화

○ 투자대상 **사업별 PM**(Project Manager)을 지정, 모든 투자절차를 일괄 지원하는 **One-man서비스** 구현

□ 경제자유구역 주요사업 착공 등 개발 본격화

○ **송도국제도시**(173만평, 美 Gale社와 POSCO건설 개발) **Asian Trade Tower, 상업·업무용빌딩, 호텔, 국제학교·병원, 중앙공원** 등 착공

* 학교 : 美 International School Services가 설립, 08.9월 개교
병원 : 美 NYP(New York Presbyterian)병원이 주도, 08년말 개원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연구·치료기능이 복합된 **바이오 메디컬 허브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 현재 추진중인 연구 용역(05.7~06.2월말) 결과를 토대로 수립

○ **부산항 신항을 개장**(06.1월, 컨테이너부두 3선석, 배후부지 2.5만평)하고, **컨테이너부두 추가 3선석, 배후부지 22만평 조성** 완료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6선석, 배후부지 22만평 조성**을 완료하고, 율촌 1산단 10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외국기업 유치

○ 경제자유구역별 **관광·레저단지 조성** 착수

- 인천 **청라지구**는 **Theme Park, Asian Village**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가 선정
- 여수 **화양관광단지**는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와 연계하여, **호텔·골프장 등 선도사업 착공** (06.1/4분기 중 실시계획 승인)

(4) 물류산업 선진화

□ 물류시장 선진화 기반조성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

○ 선진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하고, 06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조속히 정착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물류전문대학원 설립**(06년부터 매년 20억원 지원)

○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R) 광양분교 설립확정(05.12월)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하여 08.3월 개교를 추진

* 광양항 마린센터를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설립비용은 네덜란드와 우리나라(해양부, 전남도, 광양시, 경제자유구역청)가 50%씩 공동부담

□ 물류산업 종합지원 체계 정비 및 동북아 물류협력 추진

○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추진을 위해 **항공, 도로, 철도, 해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을 제정하여 물류관련 법제도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제고

○ 한·중·일 해상운수장관 회의(06.10월)를 개최하여 물류인프라 공동활용, 물류표준화, 물류인력 상호교류 등 협력사업 확정

* 한·중·일 3국 공동으로 국제물류포럼 개최(06.5월)

□ 첨단 물류정보망 활성화 및 물류지원시설 확충

○ **화물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확산에 대비한 표준화와 함께 **인천공항 물류정보망**(ACTIS) 등 물류거점시설 정보화 추진

○ **중부권·영남권** 내륙화물기지 및 **광양항 공동물류지원센터** 착공(06.하)과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06~09년)

7. 북방경제의 토대 마련

□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남북경협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활용**

○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여 인력난, 임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로 제공**

* 현재 개성공단 사업은 1단계(100만평) 개발이 진행중이며, 2단계(250만평) 사업도 조기 추진을 검토중

□ 경공업·지하자원개발, 농업, 수산업, 임업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경협을 **다각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 남북간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하여 **상생할 수 있는 경협 시스템을 확립**

□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채널을 통해 **통신 및 통행·통관 절차 개선, 제도적 장치**(예 : 원산지 표시) **마련**

○ 경협협의사무소의 효과적 운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 확대 기반 마련 등 **경협 인프라를 지속 개선**

□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방안** 모색

○ 국제기구 가입 이전 단계에서 **북한경제 분석, 연구 세미나 개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

○ 국제기구내 **아국 신탁기금**(Trust Fund)**을 적극 활용**

○ 6자회담 진척상황 등을 살펴가며 **필요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을 모색

Ⅴ.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1. 저출산·고령화 대책

(1) 저출산 대책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년)**」 수립**(06.상)

* 저출산 등 인구정책, 건강과 의료, 고용과 소득,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보육·교육비용 경감**

* 보육료지원 확대 : (05년) 41만명/2,671억원 → (06년) 61만명/4,348억원

○ e-러닝 확대, '방과후 학교'의 보육기능 강화, 학교영어 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해 **사교육 비용부담도 해소**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육아 환경 구축**

○ 국공립보육시설과의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서비스개선 유도를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아동수에 비례한 **기본 보조금 지원 검토**

○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과 동시에 **보육료 상한규제 예외시설 도입에 대응한 관련 조치 추진**

□ **출산·육아휴직제도*** 및 이에 따른 **대체인력확보 제도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출산·육아 부담완화

* 육아휴직 다양화: (현재) 전일제 휴직→(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2) 고령화 사회의 대비

□ 장기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역모기지 제도 등 **고령친화적 금융제도 마련**

○ 중산 서민층 고령자의 복지지원을 위해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역모기지 상품을 개발**

* 06년 하반기중 공적보증·세제지원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보험사의 고령친화산업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복지기능 제고**

○ **자산운용산업을 활성화**하여 연기금·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개인들의 투자수단을 확대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 직무재설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 등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

○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근무형태를 활성화**하고, 고령자 인재은행의 단계적 확충과 고령자 취업알선 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등 **고령자 고용 인프라를 확충**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기본·시행계획)**을 06년 상반기까지 마련**

* 고령친화산업 중점 육성분야(8대 부문, 19개 전략품목)
①요양산업, ②기기산업, ③정보산업, ④여가산업, ⑤금융산업, ⑥주택산업, ⑦한방산업, ⑧농업

2.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속 전환**(국민연금법 개정안)

* 급여 : 현행 60% → (05~07년) 55% → (08년) 50%
부담 : 현행 9%에서 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 인상 (30년 15.9%까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금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운용방식의 다변화 및 운용기구의 전문성 확충**

○ 주식·SOC·PEF·해외투자 등 **투자대상 다변화 및 위탁투자 확대** 등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방안 검토**

○ 재무적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국내 자산시장 발전과 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06년말) 이후의 **국고지원 방식 개선 및 국민의료비 급증방지방안 검토**

○ **지역건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 정비**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약제비 절감방안,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 국민의료비 부담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추진

□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 최소화 및 운영 내실화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 가입제의 원활한 시행(06.1월) 및 활성화 추진

○ 고용보험의 **적정 적립금 규모**를 책정하고 이에 맞춰 **보험요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 (06년 고용보험법 개정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마련 (06년 관련법령 개정 추진) 및 중복급여 조정 등 **현행 보험 급여체계 개선**

○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민원인 편의 증진**

* 부과기준 : 임금총액 → 과세대상 소득, 부과방식 : 자진납 → 고지납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

○ **연금 수급보장에 대한 불안**과 **운용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연구용역 추진)

○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사업장 중심의 **우수도입모델(best practice) 발굴·확산 등 지원방안 마련**

3. 친환경·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 CO_2, N_2O 등 「**온실가스의 처리기술개발 계획**」 수립(06.상)

○ 저감잠재량 분석 및 감축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시스템**」 **구축**(06.하)

□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05~07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등 고유가의 고착화에 대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축

* 06년 주요시책 : 자동차업체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06.1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06.9월) 등

○ **바이오디젤(B-5) 보급**의 전국확대, **바이오에탄올 유통 시스템** 실증 연구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기반 강화

□ 「**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 10개년**(06~15년) **계획**」 수립을 토대로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에너지·자원분야 R&D 예산: (05년) 3,126→ (06년) 4,090억원

□ **재제조·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내 자원순환 체제 구축**

○ 07년까지 전주시에 재활용 산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재활용업 경쟁력 제고

○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시스템 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 환경시장 확대지역에 대한 **정보·마케팅지원**을 통하여 **재활용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산업단지내 기업간의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 05년 포항, 여수, 울산 사업착수에 이어 06년 시범단지 추가선정

4. 중장기 시계의 정책대응 및 미래위험 관리

(1) 중장기 시계의 재정운용

□ 중장기에 걸친 재정전망 및 재정위험 분석 강화

○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 추이 등 **경제의 구조적·추세적 변화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세입 및 지출전망** 작업 추진

○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

□ 중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 공적연금 개혁,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비인플레적 방식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세제·세정 혁신**을 일관성 있게 추진

* 06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안 확정

○ 목적세 정비 등 세제 간소화 추진, 소득·자본이득·소비에 대한 조세체계 검토 등 **합리적인 중장기 조세구조 검토**

○ **기업과세 및 관세체계 선진화, R&D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

○ **지자체간 세목교환, 국세·지방세 조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지원**

○ **과세자 비율 확대**와 **소득세 기능 제고, 부동산세제 정상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술·담배·에너지 등 **외부불경제 시정을 위한 소비세 기능 강화**

(2) 미래준비를 위한 체계 구축

□ 미래의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계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 추진

○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대응

- 중장기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포함하는 등 현재 단기적인 위기 예측 및 대응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위기관리시스템(EWS)*을 보완

* 대외,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부문 등에 대하여 계량모형 등을 통하여 경제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점검

○ 각종 위원회와 부처에서 수립·운용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종합 점검하여 정책간 정합성 제고

□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 전망 작업을 추진

○ 중장기 인구수급, 주택수급,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거시경제 전망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전망간의 일관성(consistency) 유지

* 06년 중 관련부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장기전망 T/F를 구성, 작업에 착수

< 별 첨 2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재 정 경 제 부

□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유도

○ **신용정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서민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주의 의무제도 정착**

□ 세제 선진화 및 조세체계의 국제화

○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 방안 추진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06년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정밀분석하여 **연장여부 검토**

○ **공동사업과세제도 개선방안**(06년중),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비 방안**(06년 상반기) 마련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관세율 체계 조정** 및 **남북간 관세특례제도 도입**

□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재정**과 함께 **중장기적인 채무관리 계획 수립,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방안 검토** 등 추진

○ 국유재산 임대체계 정비, 국유지 개발방식 다양화 등 **국유지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활용도 제고

○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정부계약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 지속적인 공교육 내실화 추진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로 **교육수준의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고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등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책무성 강화**

○ **수준별 교육과정** 정착, AP 제도 도입, 속진·조기졸업 제도 운영 활성화 등 **수월성 교육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 지속 추진 및 저소득층 교육지원으로 **지역간·소득간 교육격차 해소**

○ 유아, 장애아, 저학력 성인, 실업계고 학생, 학교부적응아, 새터민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

□ 국가발전을 선도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개발

○ **대학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를 촉진**하고, **제2단계 BK사업** 추진, **법학·의치의학·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도입, 커넥트코리아 사업 등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지속 추진하여 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

○ 체계적인 **e-러닝 지원체제 구축**과 **e-러닝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교육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 촉진**

과 학 기 술 부

□ 범부처적인 국가 중장기 R&D비전과 전략 제시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시책을 차질없이 이행**

○ **기초연구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장잠재력 배양

○ 향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BT분야**에 대한 **효율적 추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미래국가유망기술 21」을 위한 **종합계획(안)** 마련(06.8월)

□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

○ 국가 R&D 투자방향을 점검하여 재원배분구조 개편 추진

○ R&D사업에 대한 **「先기획 後예산 제도」***를 정착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본격 시행

* 대형사업 사전기획 의무화, 다부처 관련사업 공동기획 등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사업 대상

○ 연구성과의 종합적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06.3월)

* 국가차원의 연구성과 종합관리, 특허 등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부문간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도모

○ 지방 R&D예산 확대, 중장기 기술혁신로드맵(RTRM) 추진 등을 통해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

○ 전반적인 R&D 활동을 강화하여 **과학기술분야**와 **인접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외 교 통 상 부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참여

○ 06년 DDA협상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분야별 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차원의 협의를 강화

○ 협상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주요교역대상국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 지금까지 확보된 대륙별 교두보와의 FTA 체결을 바탕으로 선진거대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 노력

□ 우리기업의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세일즈외교 강화

○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

□ 주요 교역상대국 및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확대

○ 한·중·일 투자협정 논의 가속화 및 투자환경개선 협의

○ BRICs 국가 투자 진출 확대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전략적인 자원확보 및 수급다변화 추진

○ 동북아에너지협의체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문 화 관 광 부

□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공연예술분야의 고부가가치화, 산업화를 위하여 **서울아트마켓의 확대** 및 공공미술관을 활용한 **아트페어 상시 운영**

○ 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비 지출의 소득공제, 문화마케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업무추진비 집행시 **문화비 지출 확대를 적극 권장**하여 문화예술의 수요 확대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한류의 지속을 위한 **쌍방향적 교류 확대** 및 **해외문화원을 『한국문화종합서비스센터』로 확대·개편**

○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전문펀드 개설 및 특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콘텐츠 유통의 선진화 도모**

○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지속적 지원**으로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창출하고 **DMB 등 뉴미디어 산업의 적극 육성**

□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범위의 확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 수립**을 통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 유교문화권, 남해안관광벨트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과 태안, 무주 등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

□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 **스포츠클럽 제도화, 「스포츠 7330 캠페인」** 등 생활체육 여건 조성

○ IT 접목 **첨단스포츠 용품산업 지원 확대 및 프로스포츠 마케팅능력 강화 등을 통해** 스포츠여가산업 발전 기반 구축

농 림 부

□ DDA/FTA 농업협상 대응

○ DDA 세부원칙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서(C/S) 작성 및 협의**

* 05.12월 홍콩각료회의 초안 발표후 유사입장국과의 공조강화로 관세감축폭 최소화,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 등 노력 지속

○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대응한 농업협상 전략 마련**

* 보완을 위해 필요시 연구사업 추가 실시 검토(06년 상반기)

** 진행중 또는 사전단계의 FTA 협상 면밀한 대응체제 구축

○ DDA/FTA 농업협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안 마련

□ **쌀산업의 체질강화·쌀농가 소득안정 등 쌀관련 대책 추진**

○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

* 목표가격과 농업진흥·비진흥지역에 대한 고정직불금 차등단가 수준을 고시(05.10월)하고, 05.12월 고정직불금(60만원/ha) 지급 계획

** 85% 미달액은 06.6월경 변동직불금으로 지급

○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

○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에 대한 05년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06년 공공비축제 개선방안 검토**(6월말), **시행방안 확정**(7~8월)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Traceability) 추진**

○ GAP 확대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원 및 교육·홍보 강화

○ 이력정보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15억원, 상반기) 및 09년 본격시행 대비 시범사업 확대 추진(06년 : 14개 브랜드, 3개시지역)

산 업 자 원 부

□ 경제활성화 및 부문간 동반성장 역점 추진

○ 본격적인 설비투자의 확대,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등으로 경제활성화 기반 구축

○ 대·중소상생협력 지속 추진,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지역산업지원체제 혁신 등 부문별 양극화 해소

□ 산업기술의 사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체제 강화

○ 기술이전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기술금융·R&BD 프로그램 실시 및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

○ 디자인역량·품질경쟁력 강화, 공학전문인력 양성 등 고부가가치화 지원 및 고령친화·IT·BT·NT 등 新樹種 산업 육성

□ 개방형 선진통상국가 기반 조성

○ 세계일류상품 지속 발굴,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네크워크 구축 및 해외 현지「한국투자기업지원센타」확대 설치

○ 네트워크형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 국민경제기여도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제 도입 및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 지속가능한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 정상자원외교 성과를 차질없는 이행,「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지속 추진, 자원부국과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10개년 계획」신규 수립·이행, 온실가스의무부담 대응을 위한「기후변화협약 제3차 정부 종합대책」지속 추진 및「수소경제마스터플랜」세부사업 이행

정 보 통 신 부

□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u-Korea 확산**

○ u-Korea의 혜택을 국민 실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u-City의 표준모델 정립 및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

○ 정보격차해소, 개인정보보호, 해킹·바이러스 방지 등 **역기능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u-문화** 조성

□ IT839 품목의 **수요중심 정책**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유도

○ **WiBro, 지상파 DMB 서비스 개시**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정보통신** 편익을 견인

○ **100만원대 국민로봇**, 모바일 RFID 등 대규모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

○ 지재권 클리닉센터를 통해 **IT839 결과물**의 **지재권 관리** 강화

□ IT기반의 **융합(IT+BT+NT)·지식서비스**,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IT산업을 **고부가가치화**

○ 나노 SoC, 바이오 정보분석 등 **IT·BT·NT 융합기술** 개발

○ IT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지식**, e-러닝, 게임, 특허 등 경쟁력 있는 **IT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시스템 **대기업**과 IT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78개** 중점 IT부품을 개발하고, IT기반 **융합** 부품·소재 **원천기술개발** 강화

□ IT강국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등 **국제정보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국내최초로 UN산하 **ESCAP ICT 훈련센터** 유치

보 건 복 지 부

□ 저출산·고령사회 체계적 대응

○ 범정부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추진

○ **노인수발보장법령 제정** 및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 80천개 창출 및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및 투자다변화 추진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적극적 탈빈곤 정책 추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등 **사회안전망 확충**

○ 18세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빈곤 탈출 지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의 복지기능 개편 등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선** 추진

○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인상 및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확대

□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산업 육성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기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금연·운동 등 **건강증진사업** 대폭 확대 추진

○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보건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의료서비스 품질·경쟁력 강화 등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 **식품·의약품·혈액 등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환 경 부

□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지침 마련, 전략환경평가제도 본격 시행,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 한반도 3대 핵심축 보전사업 착수, 국가생물자원 관리강화

□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 건강영향평가 실시, EU 신화학물질제도(REACH) 대응체계 구축, 국제화학물질 관리전략사업(SAICM)에 적극 대응

○ 새차증후군 등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수도권 등 전국 대기환경개선대책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본격 시행,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토양보전 및 지하수 관리체계 강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 경제·사회체제 구축

○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 촉진, 미래 환경기술 개발 및 일류 환경산업 육성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기반 구축

□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의 선도

○ FTA, DDA 등 환경-통상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선진환경규제 대비 기업지원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강화

○ 동북아 등 국제환경협력 강화, 북한 환경협력사업 추진

노 동 부

□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 등) 유형별로 적합한 취업서비스 제공 등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 직업지도 활성화*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고용안정센터), Job school(중고원) 등

○ 기업·지자체 연계방식의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등 안정적·지속적 일자리화

○ 고용안정센터를 지역고용 네트워크의 허브기관으로 확충하고,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법인으로 개편·기능 강화

* 민간서비스기관 규제 완화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는 취약근로계층 보호·지원 강화

○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큰 취약분야 중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차별시정 및 예방기능 강화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점검, 비정규직 입법을 통한 차별시정위원회 가동 등

○ 최저임금 이행지도,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권리보장 및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도입 등 임금보장장치 강화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촉진 및 대기업의 우수훈련프로그램 수강 지원, e-러닝 직업훈련 활성화 등 취약계층 능력개발 지원

* 영세자영업자의 「Re-Start」를 위한 전직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 자율과 책임의 선진 노사관계 구축

○ 06년초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시행에 따른 매뉴얼·홍보 등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 「법과 원칙」 틀 내 「대화와 타협」의 노사자율 해결기조 정착

여 성 부

□ 여성인적자원 활용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여성 친화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하여 고학력 여성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 국가차원의 「여성인적자원 혁신방안」및 지역 발전전략과 부합한 「지방 여성HRD 혁신네트워크 구축방안」마련

□ 여성취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학력 여성 청년층 취업 지원

○ 여성기술인력 및 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체계 구축

○ 전업주부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수요 발굴 및 교육수료생 구직알선 적극 실시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확충하고 임대주택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합리적인 수급계획 마련

*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에 사회복지사 배치 등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내 복지·의료·교육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예정

○ 07년도부터 만5세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무상보육 확대

○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아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정을 확대

건 설 교 통 부

□ 국토균형발전시책의 본격 추진 및 친환경 국토관리

○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 및 수도권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매수를 본격화하고 개발계획 수립,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완료

○ 친환경도시, 생태하천·공원 등 친환경 국토관리체계 구축

□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및 건설교통 선진화

○ 민자 고속도로사업 추진, 투자재원 확보, 해외건설 활성화 등 건설교통분야 종합투자계획을 추진

○ 토지규제 합리화, 부동산시장 및 건설산업 선진화,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물류법제정비 등 건설교통 선진화 추진

□ 양극화 방지를 위한 복지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

○ 국민임대주택 11만호 건설,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다가구 가정 주택공급 및 고령화 주거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 8.31 후속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지속확충 등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지속추진

□ 동북아 물류중심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 본격추진,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 착수, 인천공항 2단계 공사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도로, 철도 등 기간교통망을 지속확충하고, 물류기본법 제정, 종합물류업 인증제, 제3자물류활성화 등 물류산업선진화 추진

□ 대중교통 육성,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 조성**

해 양 수 산 부

□ 해양과학기술(M/T) 개발 등 해양경제 확대 방안 적극추진

○ **해양심층수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06년 상반기)하고 심층수 상용생산 추진

○ **대형위그선** 및 해양바이오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마련**

○ 폐기물 해양투기 저감과 해양쓰레기 대책 추진 등 **지속이용 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 전국 **마리나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 고부가가치 항만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한·중·일 해상운수장관 회의를 개최**(06.9월)하여 동북아에서 물류 리더쉽을 확보하고 환적화물 창출기반 마련

○ **부산·인천항에 대한 노무공급 상용화** 및 항만의 관리·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 또는 지자체에 이관하여 생산성 제고

□ 항만인프라의 차질없는 구축

○ **부산신항 3선석 및 광양항 4선석 추가 준공**(06년 하반기), 부산·광양항 배후부지 29.5만평 조성

* 부산항 북항 재래부두를 미항으로 재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

○ **권역별 거점항**(인천 등)을 **지역경제 지원항만으로 연계 육성**

□ 어업·수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둔 복지어촌 건설

○ **내수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방안 마련**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확대로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 어촌체험마을조성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속사업 추진**

○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지속 등 **어업생산 기반강화**

기 획 예 산 처

□ 경기회복 추세를 감안하여 **06년 상반기 재정지출은 주요 사업비 기준 52% 수준**(통합재정 기준 50%) **집행**

□ **예산낭비 축소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 추진

○ 공공기관 기능 및 규제 점검에 착수하고,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 **BTL, 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06년 BTL사업은 계약 기준으로 약 5.7조원 추진예정 (지자체사업 포함시 약 8.3조원)

○ 민간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 특별회계·기금 정비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05년중 입법조치가 미완료된 특별회계·기금 정비 관련 법률 개정·폐지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07년 예산안 편성, 국회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및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 기업결합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경제분석 등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통한 독과점형성 차단

○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 시장개혁 로드맵상 남은 과제(7개)를 차질없이 마무리

○ 심판관제도 및 동의명령제 등 심결절차의 선진화방안 검토

□ 반칙없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시스템 강화

○ 04년말 도입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더욱 확산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내실화, 사업자 교육·홍보, 분쟁조정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 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등 민간의 시장감시기능 강화방안 검토

□ 시장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소비자주권 실현

○ 통합공고제 및 광고실증제 강화 등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 자율적 소비자피해 구제시스템를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 시장의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대상을 대폭 확대 (제조·건설 : 5만개 →6만개, 서비스 : 신규 15만개)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관행의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확대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성장여건 마련

○ **은행의 신BIS협약, 보험사 리스크기준자기자본제도(RBC)** 등의 **차질없는 도입준비**를 통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능력 제고

○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 IT기반 금융거래 및 파생상품 증가 등 **시장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감독제도 정비**

○ 은행 수익원 다변화, 증권사 투자은행화,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여건 마련**

□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 유가증권 발행제도 개선,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증권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제고**

○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회계제도의 국제화 추진**

○ 증시불공정 거래,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엄중 제재**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시스템 활성화, 서민금융기관 영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충 유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금융문맹 퇴치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자율규제 기관을 활용한 **금융교육 활성화**도 추진

○ 금융회사와의 전자이첩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처리 소요 기간 단축 등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중 소 기 업 청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본격 추진

○ **벤처기업 및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기업화 적극 유도

○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모델을 개발·시행**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시책을 종합 연계하는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재정립**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시행** 등을 통해 80조원대의 공공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

□ 원활한 **창업 및 구조조정** 여건 조성

○ **회사설립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실험실 창업 촉진 등 **창업보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창업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및 **사업전환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본격적인 사업전환 지원체제 구축

□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 협력 평가지표 개발 등 **협력실적 평가·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

○ **자영업 컨설팅** 및 **상권정보 종합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률 및 생산성 제고** 도모

○ 재래시장을 다기능 복합상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제도」 도입**하고 **인접상권에 대한 동시개발** 추진